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19~2023]

2019. 6.



목 차

I. 수립 배경	1
II. 국내외 여건분석	6
III.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17
IV. 추진 과제	18
1.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18
2.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28
3. 혁신생태계 조성	38
4.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53
V. 추진 일정	60

I. 수립 배경

□ 우수한 정보통신(ICT) 기술을 바탕으로 U-City 정책 선도적 추진

-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교통·안전 등 서비스를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U-City*(유비쿼터스도시) 조성 추진

*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여기에 '도시'를 조합하여 한국의 초기 스마트도시 정책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런칭

-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08.3 제정, '08.9 시행) :

U-City 계획·건설, 관리·운영, 위원회, 지원방안, 기타(표준화, 정보보호)로 구성

□ 제 1·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도시 중심의 U-City 조성 지속

- 전략적 U-City 추진 및 지자체 관련 계획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 제시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09, '13)

《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개요 및 연혁 》

- 수립 근거 : 법 제4조, 시행령 제8조
- 수립 목적 :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제시
- 수립 주기 : 5개년 개획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제1차 종합계획('09~'13) 수립('09.11)
 - ☞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첨단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제도 마련, 기술 개발, U-City 산업육성, 국민체감 서비스)과 22개 과제 수립
- 제2차 종합계획('14~'18) 수립('13.9)
 - ☞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창조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국민 안전망 구축, U-City 확산 및 기술개발, 민간업체 지원, 해외진출)과 10개 실천과제 제시

- 이를 바탕으로 R&D(VC-10과제)를 통한 기술개발*·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U-City 서비스 접목도 확대**

* 특허출원 11건, 특허등록 20건, 기술이전 12건 시제품 9건, S/W등록 23건 등 성과

** 도시통합정보센터,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지능형 CCTV,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

□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새롭게 재편

- 신도시와 ICT를 접목해 스마트인프라를 확대한 성과는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Top Down) 접근*으로 다양한 한계 노출
 - * 공공 주도의 일방향적 접근 → 낮은 시민 체감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미흡
- 기존도시에 대한 스마트서비스 발굴·확산이 부족하였고, U-City 사업 참여 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한계
 - * LH가 발주하는 통합운영센터 건설 및 S/W 보급을 위한 소규모 업체가 다수
- 정부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는 스마트시티 의제에 대응하여, 적용 대상을 신도시에서 기존도시로 확대하는 등 정책 재편을 시도
 - 전담조직(도시경제과)을 신설('16.5)하고 정부의 8대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17.12)하는 한편, 「U-City법」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17.9 시행)
 - *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 새정부 출범과 함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새로운 정책방향 발표

- 부처간 협업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신설('17.11)하고,
 -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
-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스마트시티 맞춤형 조성·확산 방안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18.1)

◆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 등 발표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 분석과 함께,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추진방향 보완 필요

⇒ 전문가·기업·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3차 종합계획」 수립

※ 계획안 마련('18.9) → 의견수렴·공청회(~'19.6) → 국가스마트도시위 심의('19.6)

참고

스마트시티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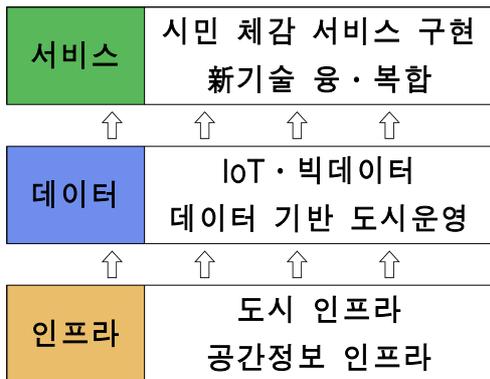
- 각국 경제 및 발전수준,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스마트시티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활용되고있으며, 국가별 접근전략에도 차이

	선진국(유럽 등)	신흥국(아시아 등)
주 체	민간주도 (삶의 질 향상)	공공주도 (국가 경쟁력 강화)
목 적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 경기부양

- 일반적으로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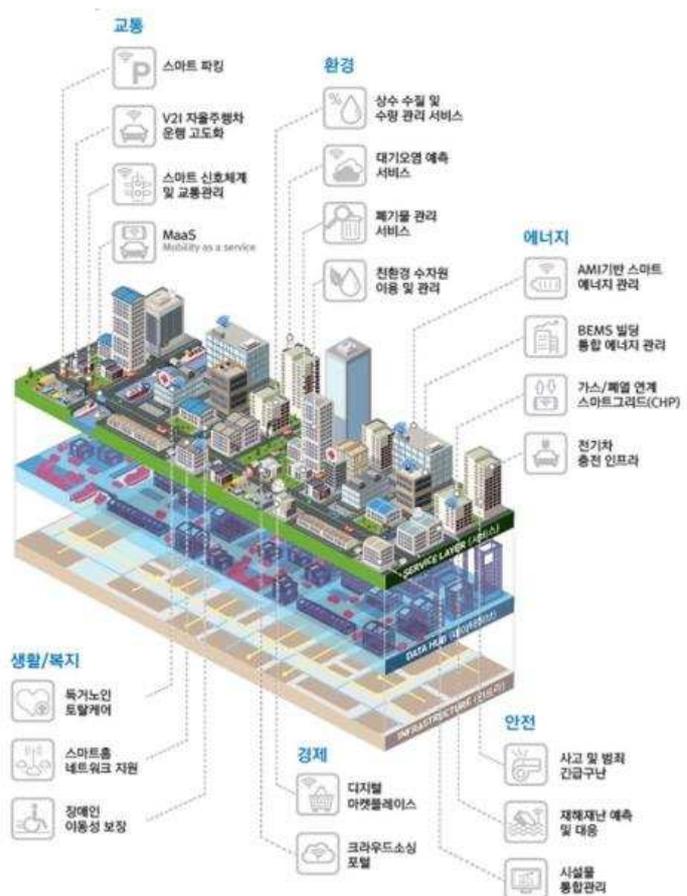
-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 도시 플랫폼 구성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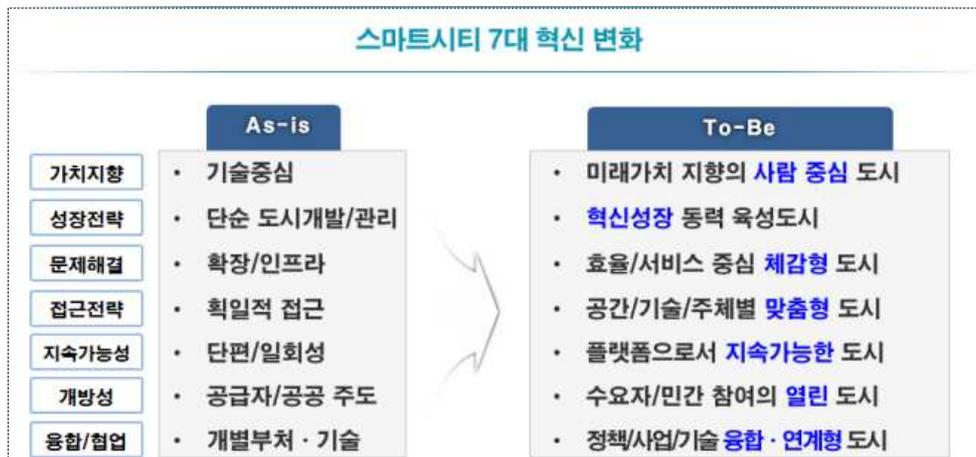
- ▶ 서비스 계층에서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구현과 융·복합 발생

- 교통·에너지·환경·생활/복지·안전/행정·경제·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



□ 정책 추진방향

-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 도출
- ⇒ 7대 혁신변화에 기초하여 △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 주체별 역할 등 전략 마련



□ 전략 1 :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 신규개발 / 도시운영 / 노후쇠퇴

① (국가 시범도시) △ 4차산업혁명 융복합 新기술 테스트베드, △ 도시 문제해결·삶의질 제고, △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균형있게 추진

※ 국내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외진출도 활성화

⇒ 성과 조기 가시화로 빠른 시일내 체감이 가능하고, 선도 모델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공기업 사업지 2곳을 우선 선정해 추진

② (기존도시) 데이터 허브모델*(국가전략 R&D 실증 2곳)과 테마형 특화단지**(4곳) 조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 시행

* △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문제 해결형(총 511억, 국비 358억)

△ 환경·에너지·생활복지 등 비즈니스 창출형(총 368억, 국비 263억)

**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계획수립 지원(2.25억/곳)

- 기타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하여 △ 인증제도 도입, △ BP 확대, △ 각 부처 성과 고도화 및 확산, △ 지자체 정보공유 등 추진

③ (노후도시) '17년 시범지구 5개를 포함하여, 매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뉴딜사업 연계 추진, 30억/곳 국비 추가지원)

* 既 선정지역 : 인천부평, 조치원, 부산사하, 포항, 남양주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민간(스타트업 창업자 등), 지역 전문가(지역 대학, 연구원) 등 참여, 저비용-고효율 서비스 제공

□ 전략 2 : 도시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 (상용기술) 시민체감이 높은 기술 ⇨ 노후 도심·기존 도시에 적용

* 예시 : (교통) ITS, BIS, 스마트 파킹/신호등, (에너지) 스마트미터, 제로에너지 건축, (환경) LID, 전기차, 미세먼지 감지, (도시행정) 통합플랫폼, 지능형 CCTV, (스마트홈) 홈 네트워킹, 쓰레기처리 등

○ (미래기술) 혁신성장효과가 높은 기술 ⇨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

-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부터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육성

□ 전략 3 : 주체별 역할 : 민간투자 / 시민참여 / 정부지원 강화

○ (민간투자) 과감한 규제개선, 혁신 창업 생태계(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공 인프라 선투자 등 추진

- 자율차, 드론 등 미래 新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고, 민간투자자와 기업참여 범위가 확대되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특례규정 도입

* 사업시행자가 신청 → 관계기관 의견수렴/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검토 → 허용

○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크라우드 펀딩 도입, 리빙랩 등 추진

○ (정부지원) 규제개선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등 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논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 시범도시내 각 부처 실증 R&D와 정책사업 예산을 집중하고, 설계비·추가 사업비 지원, 스마트시티 인프라펀드 조성 등도 검토

* 월드뱅크 공동으로 우수 솔루션 포털 구축, 스마트시티 워크('18.9) 등 국제행사

II. 국내외 여건 및 현황 분석

1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

- **[인구·경제] 저출산·고령화 심화, 저성장·공유경제 등 산업구조 변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8년 이후 총인구 감소 등 인구증가가 둔화되어,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 및 도시쇠퇴*, 공간격차** 예상
 - * 2040년 기준, 거주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52.9%, 인구증가지역 29.8% 전망
 - ** 인구 감소 → 생활 인프라 수요 감소 → 공급 저조 → 생활사막(Life Desert) 고착화
 - 저성장 추세는 신규투자 감소 및 인프라의 노후화를 초래하고, 공유경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기후·환경]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관심**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재난·재해 위험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는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 *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의 80%는 도시에서 발생하며, 특히 교통·주택 등 도시생활과 관련된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
 - 유럽 등 선진국은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모델 추구
 - * EU는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에너지 효율성 20%↑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활용
- **[기술·산업] 4차산업혁명으로 초연결·지능사회 출현, 신산업 대두**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IoT, 모바일,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 도시내 초연결 및 초지능화 가속
 - 주거·이동·경제활동 등에서도 유연성과 연계성, 지능화 확대 전망
 - 자율자동차, 지능형 로봇, 드론,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다양한 신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구조 혁신과 함께 일자리 수요도 변화
 - * 자동화·지능화로 단순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창의적·고속런 일자리 증가 전망

2 국내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1. 정부 정책 추진현황

□ [법정부 정책방향]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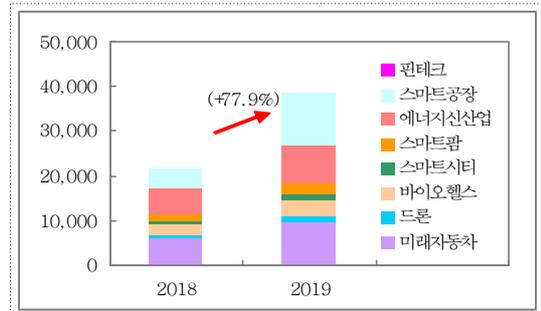
*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 스마트시티,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핀테크, 미래차(전기·수소차·자율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 그간 분야별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8대 선도사업에 대한 '19년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전년比 78% ↑)

【 8대 선도사업 既 발표 주요대책 】

구 분	주요대책
스마트공장	스마트 제조혁신전략('18.12)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18.7)
핀테크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18.3)
미래자동차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8.2)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
스마트팜	스마트팜 확산방안('18.4)
에너지신산업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드론	드론산업 기반 구축방안('17.12)

【 8대 선도사업 예산 반영현황(억원) 】



○ 아울러 ①데이터경제, ②인공지능, ③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 및 공통분야로 ④혁신인재양성을 8대 선도사업*과 연계 추진('18.8)

* 기존의 DNA는 전략 투자분야로 재편, 고부가가치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추가

【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체계도 】



【 플랫폼 경제 3대 분야 】

구 분	주요내용
데이터 경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맵 구축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실증사업 추진
인공 지능	AI 기반의 고부가가치 연관 산업 창출 고성능 컴퓨팅, 알고리즘 등 R&D 확대 지능형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기술개발
수소 경제	생산, 저장, 이송, 활용 등 밸류체인 구축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 열차·선박 개발 친환경 수소생산 원천기술 개발

□ **[스마트시티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진화**

① (~'13, U-City 구축) 제2기 신도시 및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에 고속정보통신망·시스템(ICT) 구축 사업 결합

*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백만m² 당 평균 약 150억원 예산 투입

- U-Eco City 연구개발(R&D) 사업('07.8~'13.6, 1,016억원)을 통해 U-City 기본서비스 및 요소기술, 통합플랫폼 등 기반기술 개발

② ('14~'17, 시스템 연계) 既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공공을 중심으로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 추진

- 지능화 도시정보시스템 R&D 사업('13.12~'19.3, 236억원)을 통해 개발한 공공분야 5대 연계서비스* 기반 통합플랫폼 보급** 시작

* ①112 긴급영상·②긴급출동 ③119 긴급출동, ④재난안전상황 ⑤사회적약자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12억원(국비·지방비 각 50%), 19년 현재 37개 지자체 보급

③ ('18~, 스마트시티 본격화) 4차산업혁명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리빙랩, 혁신생태계 등 새로운 개념들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

-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국가 시범도시 조성, 기존도시 스마트화 강화, 산업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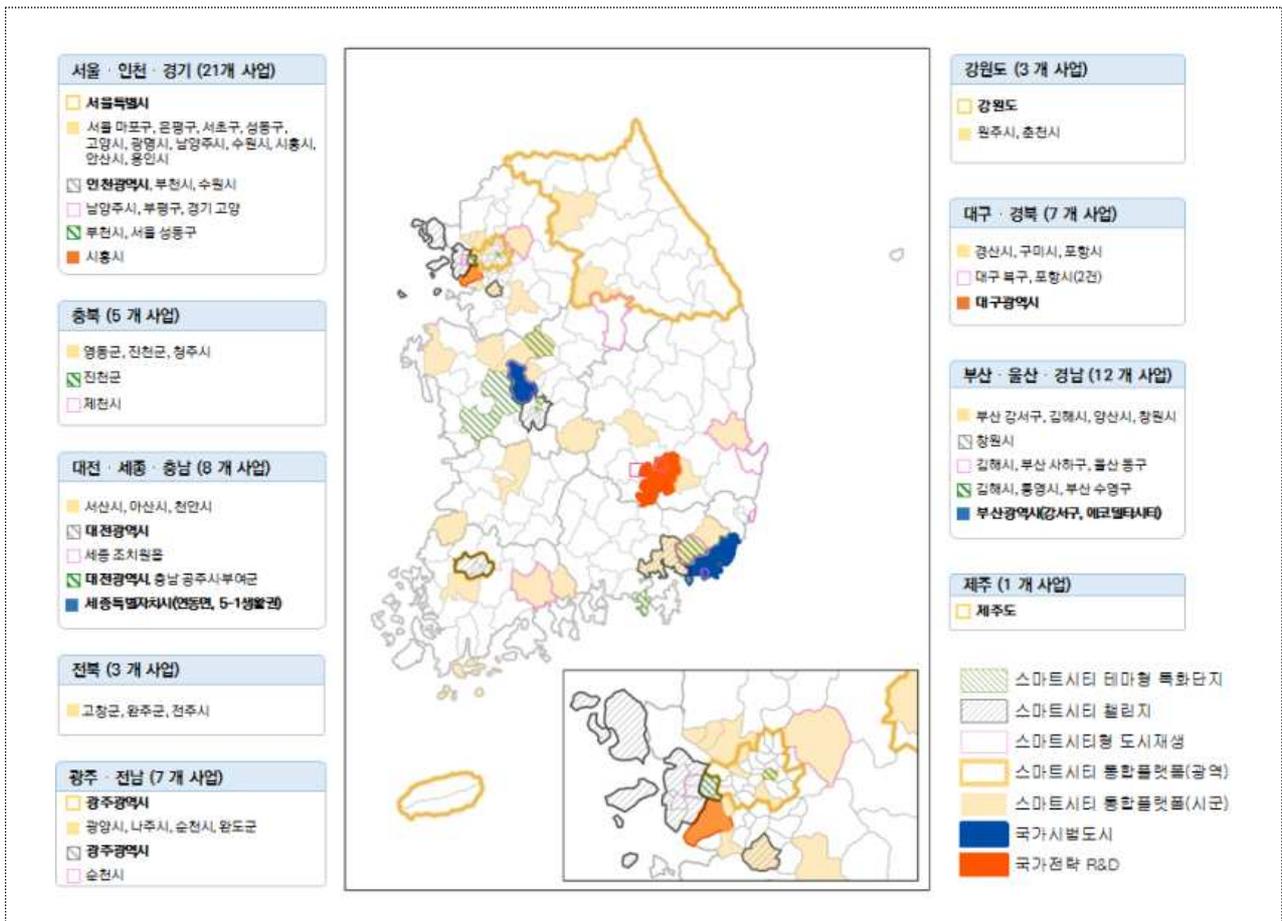
	1단계 (~'13)	2단계 ('14~'17)	3단계 ('18~)
목 표	건설·정보통신산업 융복합형 신성장 육성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도시 문제해결 혁신 생태계 육성
정 보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다자간·양방향
플랫폼	폐쇄형 (Silo 타입)	폐쇄형 + 개방형	폐쇄형 + 개방형 (확장)
제 도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U-City법 제2차 U-City종합계획	스마트도시법, 4차산업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주 체	중앙정부(국토부) 중심	중앙정부(개별) + 지자체(일부)	중앙정부(협업) + 지자체(확대)
대 상	신도시(165만㎡ 이상)	신도시 + 기존도시(일부)	신도시 + 기존도시(확대)
사 업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 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 추진	국가시범도시 조성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2. 지자체 추진현황

□ [관심 증대] 많은 지자체가 전담조직을 두고 다양한 사업 추진중

- 초기에는, 특별·광역시 등이 신도시와 택지개발 사업을 토대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접목하면서, 지자체간 수준격차 발생
- 최근에는,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
 - 전국 78 개 지자체(광역시 17개 시·도 전체 + 기초 61개, '19.6)가 스마트 도시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중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지자체 전담조직 추이 : '14년 10개 → '18년 34개 → '19.6월 78개
- 한편,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조성·확산 노력에 힘입어, 스마트 시티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으로 집계 중

《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지자체 현황 》



□ **[서비스 확대] 스마트 서비스 및 사업 유형도 다변화 양상**

- (스마트 서비스) '14년의 경우 방법·방재(35%) 및 교통(32%) 등 2개 분야가 67%를 차지하여, 스마트 서비스가 특정 분야에 집중
- 최근에는 방법·방재(24%)와 교통(22%) 이외에도, 행정(15%), 환경·에너지·수자원(15%), 시설물관리(8%), 보건·복지(7%) 등으로 다변화

《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중 지자체의 서비스 현황 ('18.10) 》

서비스 분야	응답 지자체 전체	1개 지자체 평균	비율
방법·방재	102	1.5	24%
교통	91	1.4	22%
행정	63	1.0	15%
환경·에너지·수자원	64	1.0	15%
시설물 관리	32	0.5	8%
보건·의료·복지	28	0.4	7%
문화·관광·스포츠	20	0.3	5%
근로·고용	10	0.2	2%
물류	4	0.1	1%
교육	4	0.1	1%
주거	5	0.1	1%
계	423	6.4	100%

- (사업 유형) 기존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탈피, 데이터 중심 플랫폼 구축 또는 신산업 창출과 연계된 혁신공간 창출로 전환에 관심

《 스마트시티 현재 추진유형 》

첨단인프라 구축형	플랫폼 중심형	혁신공간 창출형	계	무응답
26	32	3	61	5
43%	52%	5%	100%	



《 5년 내 스마트시티 추진 유형 》

첨단인프라 구축형	플랫폼 중심형	혁신공간 창출형	계	무응답
12	35	15	62	4
19%	56%	24%	100%	

※ 66개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18.10)

3 해외 주요국 추진동향

□ [시장 전망] 기관에 따라 다르나, 향후 10년간 가파른 성장 예상

-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4%의 성장을 통하여, 2023년 6,172억 달러(약 692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됨(Markets and Markets, '19)

《 시장조사 기관별 시장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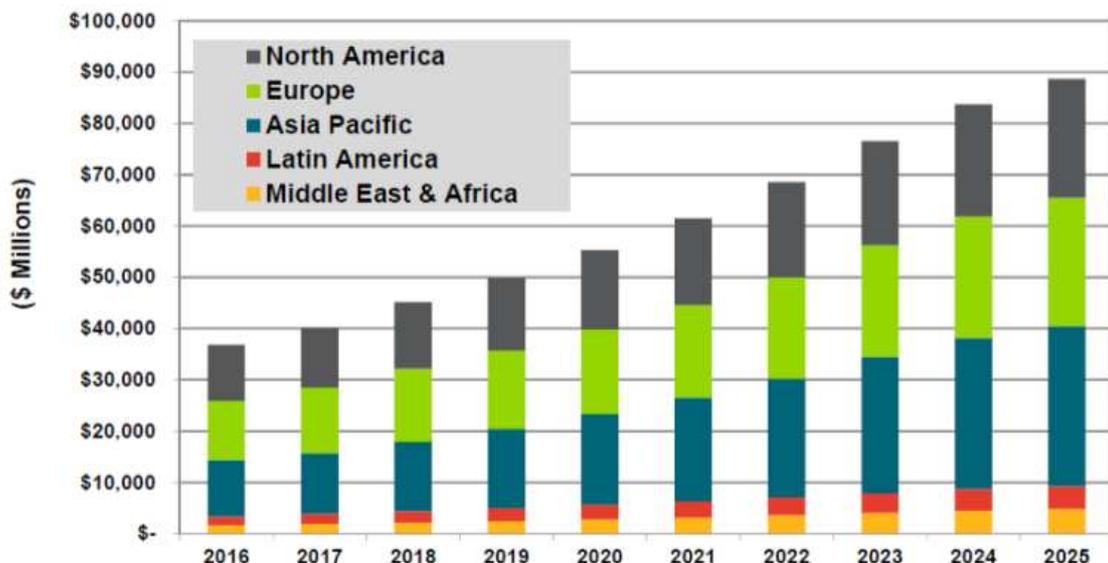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
Markets and Markets ('19.1)	• 2018년 3,080억 달러(약 345조 원)에서 2023년 6,172억 달러(약 692조 원)로 연평균 18.4%씩 전체 시장 성장 전망
Navigant Research ('17.4)	•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장은 2017년 935억 달러(약 48조 원)에서 2026년 2252억 달러(약 113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Frost & Sullivan ('17.10)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까지 2.1조 달러(약 2,4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시장조사 기관별 전망은 대상분야 차이와 파급효과 고려 여부 등에 따라 다양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의 지역별 수익 증가를 살펴보면, '19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로 스마트시티 요구가 지속 확대

《 지역별 연간 수익 전망 : 2016-2025 Navigant Research Report('16) 》



□ **[각국 현황] 선도국·개도국 모두 스마트시티를 전략적으로 추진**

- 선도국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업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 데이터·플랫폼 중심 다양한 솔루션 제공

- 아시아 등 개도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정책 추진**

《스마트시티 투자규모('10~'30, NBP)》



-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월드 엑스포 콩그레스(바르셀로나), CES(미국)** 등 행사 개최와 함께 **ASCN(아세안)** 등 다자 협력도 진행

《세계 주요국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현황》

- **(싱가포르)** 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정부주도** (총리직속 조직) + **민관 파트너십**(국영통신사 Singtel 사업주관) 운영
 - * △ 디지털 정부 △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사회 구축을 목표로 추진
- **(바르셀로나)** ‘22@Barcelona’를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24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 곳곳에 구현
- **(중국)** ’15년 신형도시계획에 따라 ’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지혜성시(智慧城市)** 발표, **총 1조 위안(약164조원)** 투자 계획
 - * 중앙정부 예산 기반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 ICT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로 전환
- **(일본)** 신성장전략(‘10~’20) 일환으로 **에너지·환경 분야**에 집중해 스마트시티를 추진중이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활용(’17.3)
 - * 국가전략특구법 개정(’17.3월), 자율차·드론과 같은 근미래 기술분야 규제 완화
- **(인도)** ’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15.6), **2조 500억 루피(약 33조 8045억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 *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설치 중점
- **(미국)** ’15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해 **1.6억 달러 R&D 투자** 추진, **경쟁공모 방식**의 지자체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병행
 - * 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각 지역이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책 마련(콜럼버스 市)
- **(EU)** 스마트시티 관련 R&D 투자 전략으로 **Horizon 2020**을 추진 중, ’14~’20년까지 **약 800억 유로 투자**(’18.7월 기준, 12개 프로젝트 총 4,018억 원)

참고

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

◇ 도시별 특징에 맞는 콘텐츠 도입 → 도시 성장단계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수립과 적절한 솔루션의 접목이 중요

① 데이터 활용 도시 플랫폼 구현 ⇨ 단편적인 솔루션 공급 탈피

- (밀턴킨즈, 캠브리지) 데이터 허브를 도입, 도시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 수요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예) 열 지도 형태의 지역별 범죄율 정보, 지역의 물 사용량 정보 제공 등

② 리빙랩·테스트베드 조성 ⇨ 자유로운 실험공간 제공

- (산탄데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과 ICT 기업들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조성하고 도시 전역을 기술·서비스 실험 공간으로 제공*

* 도시 내에 설치된 2만여 개의 센서, 컬렉터, 카메라 등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공공기관·일반기업·시민들이 도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데이터를 활용

- (뉴멕시코) 3.5만명 규모 무인도시(10억달러 투자)로 교통·통신·에너지 관련 기업·연구소에 각종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프리 공간 조성

③ 시범도시 구축 ⇨ 도시 전체를 대표 모델로 조성

- (국가주도 : 마스다르) 세계 최초·최대의 친환경 계획도시로 이산화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국가적으로 추진 중

* (부지면적) 6km², (공사비) 220억 달러, (상주인구) 4만명, (완공시기) '30

* (특징)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新교통 시스템 도입 등

- (민간주도 : 토론토) Google Sidewalk Lab 주도로 기술·프로젝트 특징에 따른 다양한 사업모델 진행(CPS, 자율대중교통, 모듈러캠퍼스 등)

④ 서비스공모·챌린지 운영 ⇨ 기업·시민참여 강화

- (미국 콜롬버스) 美 교통부가 도시공모(Smart City Challenge)를 통해 5천만 달러 지원 → 커넥티드 교통 컨셉으로 콜롬버스市 선정

* 78개市 지원, 콜롬버스 선정('16~'20), 민간기업(아마존, AT&T)에서 대규모(약 2억달러) 투자

4 평가 및 시사점

① 국가 시범도시와 함께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성과 창출 필요

-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조성·확산 기틀을 마련하고,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정책 추진동력 확보
 - 특히, 시범도시를 선정(세종 5-1생활권, 부산 EDC)하고 기본구상(18.7)과 시행계획(18.12)을 발표하는 등 국가 시범도시에 정책 역량을 집중
 - 테마형 특화단지(18~), 챌린지*(19~) 등을 신규 추진하고,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일부 기존도시 대상 확산 방안도 마련
- * 챌린지의 경우 6개 지자체 공모에 48개 지자체가 응모하는 등 높은 수요 확인

⇒ 시범도시 성과 도출(21.12 최초입주 개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세밀한 정책 마련도 필요

② 기술개발, 인재양성, 표준화 등 스마트시티 기반 고도화 요구

- 신도시 중심, 하향식 방식의 U-City R&D('07~'13, '13~'19)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물로 '통합플랫폼'의 지자체 확산·보급 사업* 착수('15)
 - * '15~'18년 : 22개 지자체 보급, '19년 : 15개 공모 59개 지자체 지원 (3.9:1 경쟁률)
- 1·2차 U-City 인력양성 사업('09~'18)을 통해 4개 대학 5,63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차 사업('19~23)에서는 6개 대학으로 확대
- 다만, 다양한 경로로 성과평가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하게 쏟아지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 부재

⇒ 효과가 뛰어난 통합플랫폼을 지자체에 조기 확산하고, 혁신성장동력 R&D(18~22년)를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미래도시 모델도 도출

- 새롭게 시작된 3차 인력양성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스마트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국내외 확산을 위한 인증제 도입도 검토

③ 민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화 필요

- 그간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지자체 대상의 플랫폼 확산과 스마트 솔루션 접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
 - 지자체와 기업 간의 수요-공급 매칭이 쉽지 않고, 다수의 기업도 공공 발주사업의 시행자로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상황
- 규제개선 관련, 신산업 특례* 등 반영(「스마트도시법」 개정, '18.8, '19.4) 및 자가망 연계확대(과기부 고시 개정, '19.3)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 * (18.8) 자율차, 드론, 개인정보 등 / (19.4)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 혁신 서비스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를 빠른 속도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발주방식 개선 등 민간의 요구과제도 산적

⇒ 스마트시티가 산업 분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은 마련된 만큼,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 필요

- 특히, 소통채널 강화, 수요-공급 연계, 규제혁신 등 본격추진 검토

④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지원 요구

- 스마트시티가 기후변화 대응, 도시문제 해결 등의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도 큰 폭 확대 전망(年 18.4%↑)
 - 한국은 다수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우수한 ICT 기술을 강점으로 가진 만큼, 적극적 해외 진출로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 필요
 - 최근 저유가 상황 등으로 부진한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도시·인프라 수출 전략에 대한 재편도 요구
- * 해외건설 수주(억불) : ('14) 660 → ('15) 461 → ('16) 282 → ('17) 290 → ('18) 321

⇒ 패키지형 도시 수출과 개별 스마트 솔루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종합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해외협력 강화, 국제행사 개최 등도 병행

Ⅲ.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비 전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목 표

1.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2.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3.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 ① (시범도시) 국가 시범도시 성과 창출 및 확산
- ② (기존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확산사업 확대 개편
- ③ (노후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확산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 ① (통합플랫폼) 기초·광역 지자체 조기 확산 및 서비스 발굴
- ② (연구개발) 혁신성장동력 R&D로 데이터·AI 기반 미래도시 실증
- ③ (인재육성) 석·박사 지원, 특성화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
- ④ (정보축적) 정보포털 구축·운영, 다큐멘터리 제작 등 추진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 ① (규제혁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실증
- ② (거버넌스) 융합 얼라이언스, 지자체 협의회, 리빙랩 네트워크 등
- ③ (인증·표준) 스마트시티 인증제 및 표준화 추진
- ④ (산업기반) 창업 지원, 조달방식 개선, 솔루션 마켓 구축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 ① (해외수출) 진출 단계별 체계적 수출지원 방안 마련·시행
- ② (교류협력) 학술 심포지엄, 주요국 및 국제기구 교류·협력 강화
- ③ (국제행사) 엑스포를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육성

IV. 추진 과제

I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I-① 국가 시범도시 성과 창출 및 확산

- ❖ 백지상태 부지에 국가가 세계적 수준의 미래 스마트시티 조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新기술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 해결 및 삶의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
 - 도시조성 착수 및 서비스로드맵 마련('19), 스마트서비스 구축('20~), 입주 개시('21.末~) 이후 시범도시 성과의 국내·외 확산 추진

□ 추진 경과

- 그간 국가 시범도시 입지 선정과 계획수립, 규제개선, 예산 확보, 국내외 홍보 등 국가 차원에서 시범도시 추진의 모멘텀 마련

* 시범도시 지정 현황(2곳) :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84만평)

< 추진 단계 >	< 시기 >	< 추진내용 및 계획 >
既 추진실적	'18.1~ '18.12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제안('17.8) ▶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17.11) ▶ 세종 5-1 생,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정('18.1) ▶ 도시별 총괄계획가(MP) 선정('18.4) ▶ WSCW 개최('18.9), 해외 주요국 전시('18.8~11) ▶ 기본구상 발표('18.7) 및 시행계획 수립('18.12)
現 추진상황	'19.1~ '19.6	▶ 혁신성장 보고회 개최('19.2) ▶ 세종 공간계획 검토 진행('19.上) ▶ 합동사무소 구성('19.3), 콘텐츠 구체화 진행('19.上)
향후 추진계획	'19.7~ '23.12	▶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19.下) 진행 ▶ 건축공사 착수('20.上) 및 최초입주 개시('21.下) ▶ 혁신기술 지속 도입, 국내외 확산('22년~)

□ '19년 추진 현황

▶ 사업 추진체계 개편

- 총괄계획가(MP) 중심으로 기관간 쟁점 조율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사무소** 구성('19.3)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주요 추진전략 및 현안 등에 대해 **자문**('19.6~)
- * ①공간계획 / ②스마트 인프라 / ③스마트 서비스 / ④SPC·재정
- 시범도시 추진상황은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4차위)에 정기 보고

▶ 시범도시 조성 후속과제 이행

①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 📍 H/W 측면

- (세종) 자율·공유차 기반도시(소유차 제한), 원지형 보전 등 MP의 혁신적 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수정·보완**('19.6, '19.12)
- (부산) 현재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중이며, 시범도시 내 **헬스케어 클러스터 포함**(면적 확대) 및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완료**('19.7)

② 콘텐츠 개발 📍 S/W 측면

- (콘텐츠 구체화) 물리적인 도시공간 위에, 세종·부산 MP가 시행 계획에 제시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갈 필요
 - (스마트 인프라) 데이터·AI,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IoT) 등 구축
 - (서비스) 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주요 콘텐츠** 접목방안 마련
- * 분야별 전문성 있는 관계 공공·연구기관을 과제별 전담기관으로 지정·추진
- (R&D 연계) 신기술 테스트베드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R&D 실증사업** 연계 추진('19.6 기준 16개 사업 발굴)
- * 예 : (환경부)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 (산업부)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등
- (SPC 구성) 입주 후에도 **스마트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민·관 합동 SPC구성** 추진(관련 연구용역 및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 진행)

《 국가 시범도시 '19년 예산 사업별 전담기관 현황 》

사업명	'19년 예산	사업 개요	전문기관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50억	· 현실과 동일한 가상도시 구축을 위한 디지털 트윈 설계 및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데이터·AI 센터	40억	· 데이터 수집·활용과 AI 기반 도시 운영 계획·방안 수립 및 센터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IoT 구축	18억	· 도시내 IoT 설계, 데이터 표준화·관리방안 수립 및 IoT 구축 추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교통	10억	· 모빌리티 서비스 로드맵 및 교통 시설·공간계획 수립, 서비스 도입	한국교통연구원
헬스케어·교육	20억	· 헬스케어·교육 로드맵, 공통·특화 서비스 적용방안 수립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너지·환경	10억	· 에너지 DB 및 통합관리센터 구축방안 수립, 환경 솔루션 접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생활	10억	· 안전분야 비전·전략 수립 및 안전서비스 구현·운영방안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마스터플래너 (MP) 지원	31억	· 총괄계획단(MP단) 업무 지원 및 혁신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	10억	·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니즈 발굴, 해외 시범사업 추진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혁신 생태계 조성	10억	· 스타트업 유치 등 혁신기업 육성기반 조성,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규제 샌드박스 사업	56억	· 규제 샌드박스 사례조사·분석, 실증사업 및 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계	265억		8개 기관

* : ①스마트 인프라 / : ②스마트 서비스 / : ③MP·기업 지원

** '19년 예산은 계획 수립, 실행 예산은 '20~'22년에 투입(예산 규모 협의 중)

□ 향후 계획

- 연내 부산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실시설계·착공 등 부지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건축공사('20.上) 및 주민 최초입주('21.下) 진행
-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시범도시에 적용될 스마트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 추진('20.下)
- 시범도시 추진 성과는 향후 건설되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확산
- R&D 실증, 5G 등 신기술 접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지속('19.下~)
- 주민 입주 이후에도, 시범도시 기반 창업 플랫폼 구축,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등도 병행 추진('22~)

참고 국가 시범도시 개요 및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세종 5-1 생활권 * MP : 정재승 KAIST 교수 / 사업시행자 : LH

- (개요) 세종시 합강리 일원, 83만평, 계획인구 1.9만명(8.9천 세대), 1.4조원
- (컨셉) 인공지능(AI) 기반 도시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 (주요 콘텐츠) 모빌리티(자율·공유차) + 헬스케어(스마트 응급·진료·관리 등)
 - * 7대 혁신요소 :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 (공간구상) 소유차 제한구역 설정, BRT 중심으로 직주근접(용도혼합) 등
- (추진전략) AI 활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7대 혁신요소별 데이터 연계로 시민·기업 소통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 부산 에코델타시티 * MP : 황종성 NIA 연구위원 / 사업시행자 : K-Water

- (개요) 부산시 강서구 일원, 84만평, 계획인구 8.5천명(3.3천세대), 2.2조원
- (컨셉) 로봇 등 산업육성으로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는 미래 수변도시
- (주요 콘텐츠) 물관리(수변공간 활용 물 특화 도시) + 로봇(복지·생활관련 등)
 - * 3대 플랫폼 : 디지털 도시, 증강도시, 로봇도시
 - 10대 콘텐츠 : 로봇활용, 배움-일-놀이(LWP), 도시관리 지능화, 스마트워터, 제로 에너지, 스마트교육&리빙, 헬스, 모빌리티, 스마트안전, 스마트공원
- (공간구상)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클러스터 조성
- (추진전략) 증강·디지털·로봇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구축하여 개인·사회·공공·도시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 창출



참고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방향안

□ 3기 신도시 개요

- (목적)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전국('16년 기준 102.6%) 대비 낮은 수준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플랜 제시
 - * 주택보급률(%) 추이(서울) : '10년 96.4(94.4)→ '13년 97.3(95.1)→'16년 98.2(96.3)
- (지정현황) '제2, 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남양주 왕숙 등 5개 지구(173천 세대)를 '19년下~'20년에 걸쳐 지구지정 완료 예정

구 분	2차 발표('18.12)			3차 발표('19.5)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위 치	진접읍 일원	천현동 일원	굴현동 일원	창릉동 일원	대장동 일원
면 적	1,134만㎡	649만㎡	335만㎡	813만㎡	343만㎡
호 수	66천호	32천호	17천호	38천호	20천호
개 발 방 향	①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③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도시			②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④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 (추진일정) 2차 발표지구는 '19년下 지구지정,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착수하여 '22년 상반기 주택공급 개시 예정
 - * 3차 발표지구는 '20년 지구지정, '21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공급 예정

□ 스마트시티 조성방향안

- 행복도시, 2기 신도시 등 既 진행한 스마트 서비스 접목성과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추진성과('21~)를 더하여 3기 신도시로 확산
 - 혁신 / 체감형 기술 등이 조화된 스마트시티 고도화(Level-Up) 도모
 - *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수소 인프라,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 헬스케어 등
-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그룹 참여, 지자체 사전협의,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로 조성
 - * UCP(Urban Concept Planner), 신도시포럼(스마트시티 분과 등)

I-② 기존도시 스마트화 확대

- ❖ 향후 5년 간 총 100 곳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테마형 특화단지('18~), 챌린지('19~)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 추진
 - 효과적인 사업 관리와 다양한 유형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모사업을 (大)도시-(中)단지-(小)솔루션 단위로 재편 검토('20~)

1. 테마형 특화단지

☞ '18년 신규 추진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화 스마트서비스의 발굴·접목 지원
- (사업개요) 매년 4개소에 대해 ①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이 중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②조성 사업비 지원
 - * (지자체) 리빙랩 등 시민참여를 통해 도출된 특화 서비스를 MP에 반영 (LH) 사업 전담기관으로서 MP 수립용역 발주 및 관리 등을 총괄·지원

□ 추진 현황

- △'18년 MP 수립지 4곳(2.25억) 중 '19년 조성비(20억)를 지원할 우수지역 3곳 선정('19.3), △'19년 신규 MP 수립지 4곳 선정('19.3)

- ('18년 테마형 특화단지)

* : '19년 조성사업비 지원

구분	대전	경기 부천	경남 김해	충북 진천
목적	대덕연구단지 Re-New	미세먼지 저감	가야역사 문화관광	혁신도시 에너지 특화
규모	500억원/82만평	60억원/200만평	67억원/145만평	550억원/208만평

- ('19년 테마형 특화단지)

구분	경남 통영	충남 공주·부여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목적	재래시장 활성화	세계 문화유산도시	종합교통정보서비스	플랫폼 기반 관광서비스
규모	52억원/510천㎡	52억원/1,500천㎡	40억원/1,200천㎡	50억원/1,242천㎡

2. 스마트시티 챌린지

☞ '19년 신규 추진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 (Bottom-up)하여 솔루션을 발굴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 도입
- (사업예산) 6개소(지자체 + 기업 등)를 선정하여, 사업 기획 및 계획 수립, 신규 솔루션 접목·실증(Pilot Test)을 위해 각 15억원씩 지원
- (추진방향)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 기업' 단위로 공모 추진
 - 현황 분석,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수립, 예산 설계,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토록 자율권 보장
 - 챌린지 성격에 맞게 과정상 경쟁체제 도입(1차 선정·경쟁 → 2차 선정)
 - 혁신적인 新기술·서비스 접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용 유도

□ 추진 현황 및 계획

- (현황) 공모에 신청한 48개 지자체 중 6곳 선정('19.5, 각 15억 지원)

《 '19년 선정된 6개 지자체별 참여기업 및 주요 사업내용 》

지자체	참여기업	주요내용	지자체	참여기업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글로스퍼 등 9개사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리워드 플랫폼	경기도 부천시	한전KDN 등 10개사	e-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주차난 해소
대전광역시	(주)LG CNS, KT 등 10개사	주차 공유 및 연계 서비스 사업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주) 등 11개사	5G 기반 모바일 디지털트윈 구축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주) 등 3개사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실증	경상남도 창원시	(주)LG CNS 등 3개사	산업단지 연계 스마트시티 조성

- (계획) 6개 사업별로 기획 및 대표 솔루션 실증을 연말까지 진행, 평가를 거쳐 본사업 진행('20년~, 예산규모 등 협의 필요)

3. 향후 확산사업 개편방안

☞ '20년부터 적용 예정

□ 추진 배경

- 기존도시에 솔루션 보급·확산을 위해 챌린지(민간 제안), 특화단지(지자체 제안) 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모사업 분산으로 혼란 가중
- 개별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現 공모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토록 개선 필요

* 한정된 공모에 광역 vs 기초 지자체 경쟁 ☞ 재정자립도·조직 등 현저한 차이

□ 개선 방향(안)

- 특화단지, 챌린지 등 개별 사업을 '스마트시티 챌린지'로 통합하고, (大)도시(City)-(中)단지(Village)-(小)솔루션(Solution) 단위로 사업체계 개편

- ①민간 제안, ②지자체 제안으로 사업을 구분하되,
- 지자체 제안사업 유형에 개별 솔루션 단위 소형사업을 신설
- * (예) 스마트 놀이터, 스마트 건물목 등



- 과도한 경쟁 억제와 선정 후 충분한 사업기간 제공을 위해 공모 시기를 앞당기고(전년도 12월), 성과공유 프로그램 등 강화(반기 2회)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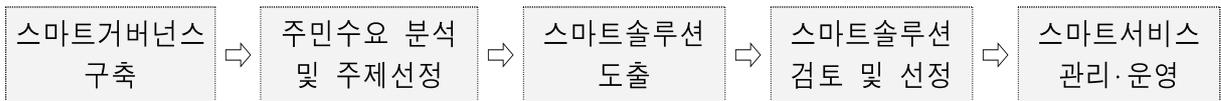
- 재정당국과 협의 후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공모 방식·시기를 확정 한 후, '20년 확산 사업부터 새로운 체제로 공모사업 착수
- 민간제안 사업(챌린지 사업) 추진시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혁신 생태계 조성
- 중·장기적으로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단위 확산 및 장애인·독거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으로 포용성도 확보

I-③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 쇠퇴 도시에 대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쏠 뉴딜사업으로 확산

□ 사업 개요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간·학계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수요·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솔루션 도출



* 스마트거버넌스 : 주민협의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유도(「가이드라인」에 반영)

*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추진

□ 추진 현황

- 경북 포항 등 7곳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대구 북구 등 5곳은 계획수립을 진행중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완료 도시 》

도 시	계획에 포함된 스마트 솔루션
경기고양	드론을 활용한 등하갯길 및 밤길지킴이, 골목길 방법순찰 등 안전서비스 제공
세종조치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조치원역 상권 유동인구 분석·창업지원, 주차문제 해소
경북포항	불꽃축제, 호미곶 일출 등 포항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VR 서비스 제공
경기남양주	홀로그램 공연장 설치, Floor scape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 관광활성화
인천부평	상인들 간 정보공유 및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는 커뮤니티플랫폼 구축
부산사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중수시스템, 온도·습도관리 등을 적용한 스마트팜 조성
전남순천	홀로그램을 활용한 여행정보 및 AR 기반 음식점·숙박정보 등 관광서비스 제공

□ 향후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19.下)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추가 선정(~'22, 年 5곳 내외)

참고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조성·확산 개요

구분	공간적 특징	추진 전략	주도적 적용기술
신규 개발 단계	자유로운 인프라 다양한 용·복합 용이 실험적 시도	<p>국가 시범도시</p> <p>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p> <p>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p> <p>* 기본구상('18.7)→시행계획('18.12) 진행 실시설계('19.上)→착공('19.下)→ 건축('20.上)→입주('21.下) 추진</p>	<p>미래형 첨단선도기술</p> <p>(혁신기술 창출)</p>
도시 운영 단계	신규 인프라 한계	<p>성과 확산</p> <p>추진 성과는 3기 신도시 등 전국단위 확산 추진</p>	<p>상용화단계 기술</p> <p>(수요기반 혁신)</p>
노후 쇠퇴 단계	충분한 기술 수요 시민참여 우수	<p>혁신성장동력 R&D</p> <p>도시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활용 및 AI 기반 운영</p> <p>대구·시흥 2곳 실증</p> <p>* 국토·과정 공동, '18~'22, 1,159억원</p> <p>스마트시티 챌린지</p> <p>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p> <p>'19년 신규사업(93억) 추진</p> <p>테마형 특화단지</p> <p>지역특성 연계 솔루션 개발</p> <p>특화계획 수립 年 4곳('18~'20)</p>	<p>비용효율적 적정기술</p> <p>(문제해결형)</p>

II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II - ① 통합플랫폼 조기 확산

❖ 통합플랫폼은 '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 보급을 추진하고, 재난·안전 분야 외에도, 복지·환경 등 분야로 서비스 확대

□ 사업 개요 및 경과

○ (개요)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방법·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서비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플랫폼*으로 연계

* 통합플랫폼 :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각종 정보시스템 연계 및 도시 상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반 S/W ☞ 정부 R&D('09~'13, 100억원)로 개발

- 지자체와 112·119·재난망 등을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 5대 연계서비스 : 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출동 지원, ④재난안전상황 지원, ⑤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노인) 지원

○ (경과) 통합플랫폼 국산화 결정('07.6, 과기장관회의)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 R&D로 개발 후, 지자체 보급 착수('15~)

*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 MOU('08.8, 국토부·행안부·지경부), 112·119 재난 등 5대 서비스('17.1~), 클라우드(서울, '17.11), 민간보안('18.3), 전자발찌('19.1~) 연계 등

- '18년까지 총 22개 지자체 보급 완료, '19년 15개 신규 선정

□ 향후 계획

○ '19년 추경으로 12개 추가 보급을 포함, '22년까지 108곳 보급 목표

※ 보급사업 추진 효과를 감안해 '21년 이후 인구 20만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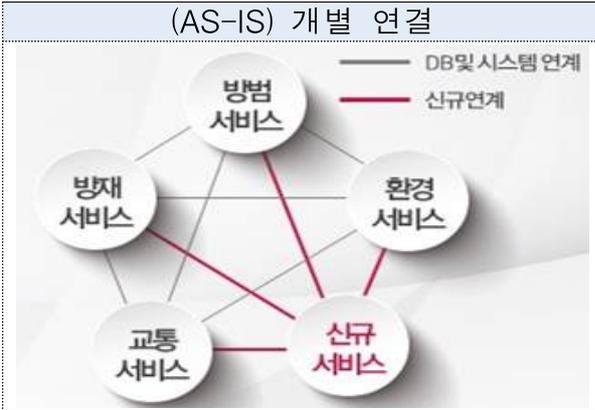
합계	'16까지	'17	'18	'19	'19 추경	'20~'22	'23~
108개	4개	6개	12개	15개	12개	59개	20만 이하 확대
예산(억)	12	36	72	93	72	354	검토중

○ 기초 지자체(229개소)와 112·119 센터 등을 연계해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 추진('2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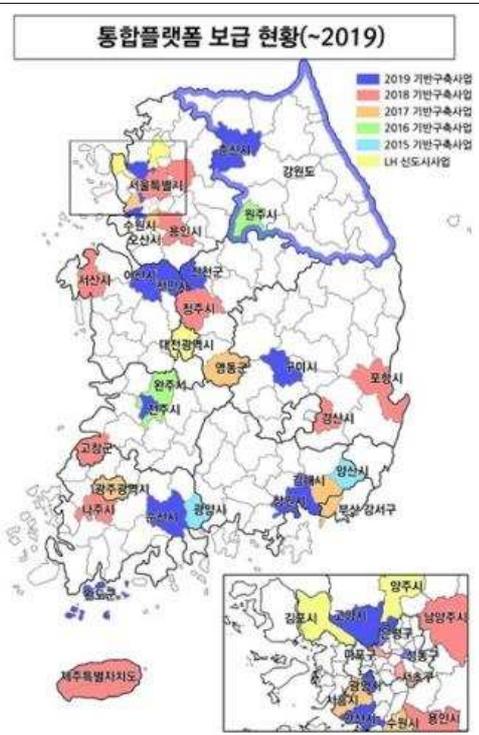
통합플랫폼 지자체 보급 현황 및 효과

□ 개념도



□ 보급 현황

구분	적용 지자체
'15	광양, 양산
'16	원주, 완주
'17	광주, 김해, 부산 강서, 수원, 시흥, 영등
'18	서울, 제주도, 남양주, 용인, 청주, 서산, 고창, 나주, 경산, 포항, 서초, 마포
'19	강원도, 광명, 안산, 고양, 춘천, 천안, 아산, 전주, 순천, 구미, 창원, 성동, 은평, 진천, 완도



□ 구축 효과 예시 (대전시 사례)

- 대전시는 통합플랫폼 실증도시로 선정('16.4)되어, 지자체와 112·119·재난망 등을 연계한 5대 연계서비스를 시범 운영
- ⇒ 112는 범죠흔 감소(6.2%), 검거율 증가(2.7%), 119는 출동시간 단축(7:26초 → 5:58초), 7분내 출동 증가(63.1→78.5%) 등 성과('18.8)

* 사회적 약자 보호(142건), 긴급 재난상황(438건) 등 총 15,117건 지원('18년)

II - ② 혁신성장동력 R&D 성과 창출

- ❖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추진
 - '19년까지 허브 플랫폼 초기모델 및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등 1단계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증 시나리오 및 기초 데이터 구축
 - '20년 이후 실증을 통한 데이터허브 플랫폼 기술 고도화 및 6대 스마트 서비스(교통·안전·행정·에너지·환경·생활복지) 개발 본격화
 - 기술개발과 실증이 완료되는 '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 확산 추진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16.8)에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
 - * '19.1월 부터 혁신성장동력 R&D로 명칭 변경 :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9개 분야
- (규모 /기간) 국토부·과기정통부 공동 1,287억원* / '18~'22년(5년)
 - * '19.1월 현재 (정부출연) 국토부 453억, 과정부 390억, (기타) 민간 235억, 지자체 209억
- (연구내용) 3개 핵심과제로 구성 : 기술개발 1개, 실증과제 2개
- (목표) 데이터 허브완성도 90%, 서비스 만족도 80%, 비즈니스 창출 5건

《 혁신성장동력 R&D 예산 현황 》

구 분	연구목표	주요 연구분야	예산(억원)			
			계	정부	민간	지자체
소 계			1287.4	843	235.6	208.8
1과제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	데이터허브 등 공통기술	261.6	221.8	39.8	-
2과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시민중심 서비스창출형 실증	교통, 안전, 도시행정	596.9	358.2	102.1	136.6
3과제	기술혁신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도시혁신형 실증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428.9	263.0	93.7	72.2

* 지자체 및 민간출연금은 차후 연구진 선정결과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현황 (실증도시 2개소 선정 및 세부과제별 연구 착수)

- (사업관리) 예비타당성 통과('17.11) → 관리규정(우리부훈령) 제정('18.2) → 운영위원회 구성('18.2) → 사업단장 선정 및 사업단 구성('18.3~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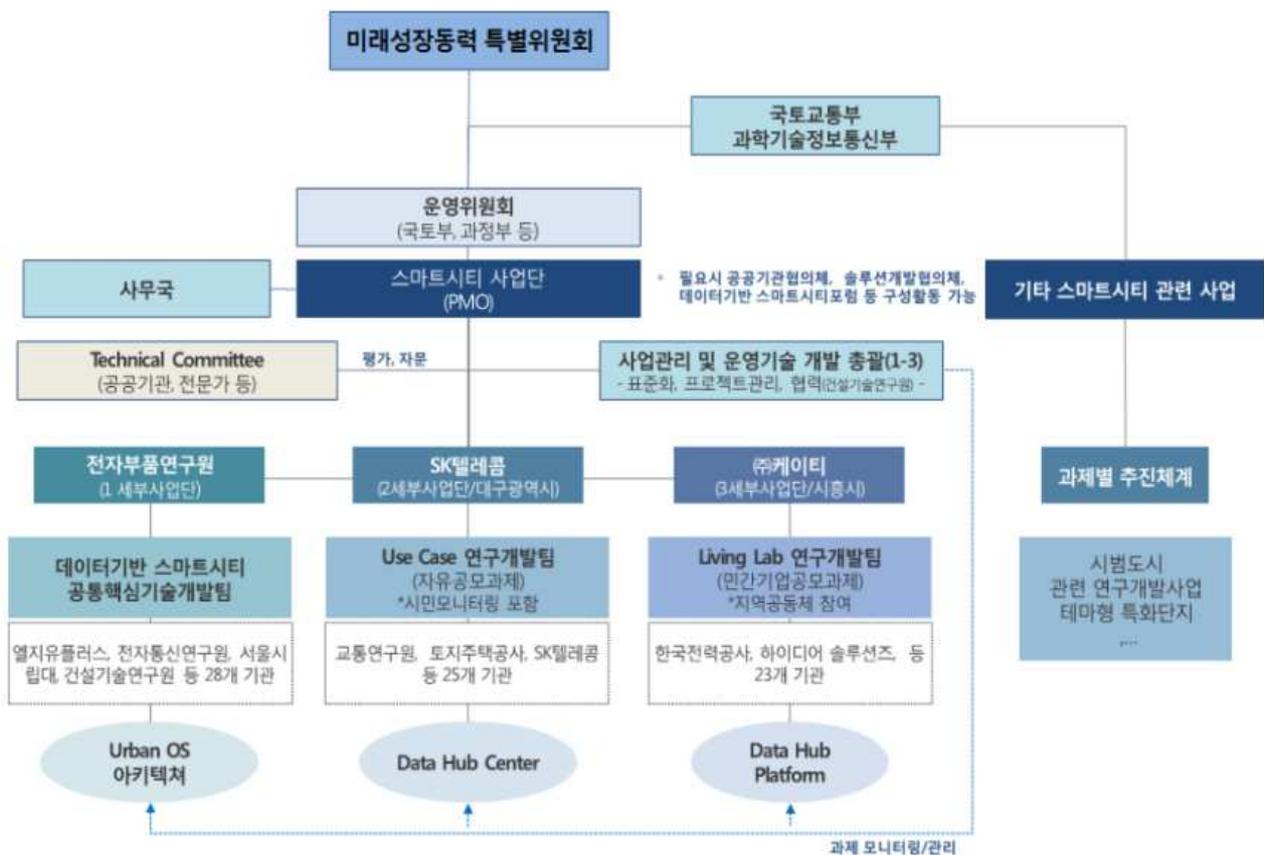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B/C : 2.12, AHP : 0.782

- (실증 지자체) 2핵심 대구광역시, 3핵심 경기 시흥시 선정('18.7)

- (연구수행기관) 세부과제(13개) 분리공모로 분야별 우수 기관 선정

- 1핵심 과제(28개 기관), 2핵심 과제(25개 기관), 3핵심 과제(23개 기관) 등 총 76개 연구기관(약 550명 참여 연구원) 참여중

《 혁신성장동력 R&D 추진 체계도 》



- (대내외 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협업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움('18.6, '19.5) 개최, 유럽 집행위원회 MOU('18.11) 체결

** 공간정보활용 MOU(LX, '18.12), R&D 실증도시 및 국가 시범도시 연계논의 워크숍('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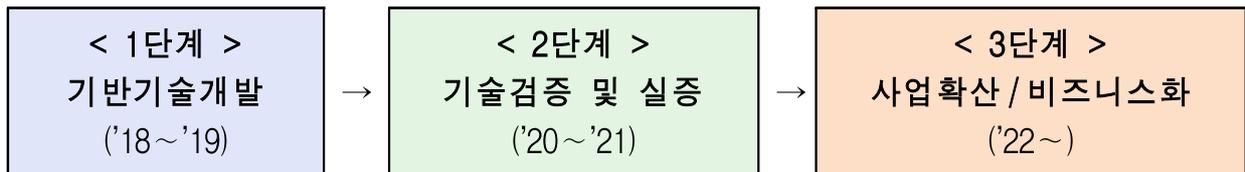
《 혁신성장동력 R&D 세부과제 및 주관기관 》

구분	세부과제	주관기관
1핵심	①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개방형 도시운영관리 및 활용모델 개발	전자부품연구원
	② 초대규모(Massive) 실시간 IoT 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③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가상화 기술 개발	서울시립대학교
	④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리·평가모델 개발 및 협력프로그램 발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핵심	⑤ (교통) 스마트 모빌리티 및 주차공간 공유지원 기술 개발	한국교통연구원
	⑥ (안전) 도시재해재난 안전 및 사회안전 긴급구난 기술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⑦ (도시행정) 데이터 허브 센터/도시행정 서비스 고도화	SK텔레콤(주)
	⑧ (지자체 자율과제) 데이터 기반 스마트서비스 Use Case 개발	대구테크노파크
3핵심	⑨ (환경) 클라우드소싱 기반 도시 대기환경 측정 및 예측기술 개발	(주)KT
	⑩ (에너지) 주택/빌딩/공장/공공 통합 에너지 관리기술(xEMS) 개발	한국전력공사
	⑪ (생활복지) 독거노인 토탈케어 및 장애인 이동성 보장시스템 개발	(주)하이디어솔루션즈
	⑫ (리빙랩) 혁신모델 기반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및 검증	(주)KT
	⑬ (지자체 자율과제) 지역수요기반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단계별 R&D 추진 계획

▶ 1단계 사업추진 계획 ('18~'19년)

《 혁신성장동력 R&D 사업 추진단계 》



① 허브플랫폼 개발 및 실증과제 준비

- (1핵심 : 허브플랫폼 개발) 데이터 허브 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19.下), 디지털 트윈 시범테스트('19.9), 초대규모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19.12)

* 필요시 실증도시(대구·시흥)외 국가 시범도시 운영 플랫폼으로 활용토록 지원 (국가 시범도시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반영, '19~22년, 총 290억원)

- (2·3핵심 : Use-Case, Living-lab) 실증 시나리오 구축('19.上), 실증용 기초데이터 구축('19.12), 허브플랫폼 프로토타입 현지화* 착수('19.下)

* 실증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플랫폼 개선 및 지자체 기존시스템 연계활용

** 2, 3핵심 지자체 제안과제 및 자유공모 과제 추진

《 1핵심 : 개방형 데이터허브 개발 마일스톤 》



② 기반기술 개발 후 실증 준비

- (협업체 구성·운영) R&D 사업단과 외부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허브 기술 표준화 및 비즈니스모델 도출
 - *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분과, 비즈니스모델 분과, 법제도 분과
- (스타트업, 벤처 참여) 선행과제 이외 추가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신기술*을 도출하고, 스타트업·벤처 등 참여 유도로 관련 산업 육성
 - * 스마트모빌리티, 에너지관리, 긴급구난, 환경 예측기술 등 7개 세세부 과제

▶ 2단계 사업추진 계획 ('20~'21년)

- 도시별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운영, 결과를 환류해 플랫폼 고도화
- 교통·안전·행정(대구시), 에너지·환경·생활복지(시흥시) 등 서비스 실증

▶ 3단계 사업추진 계획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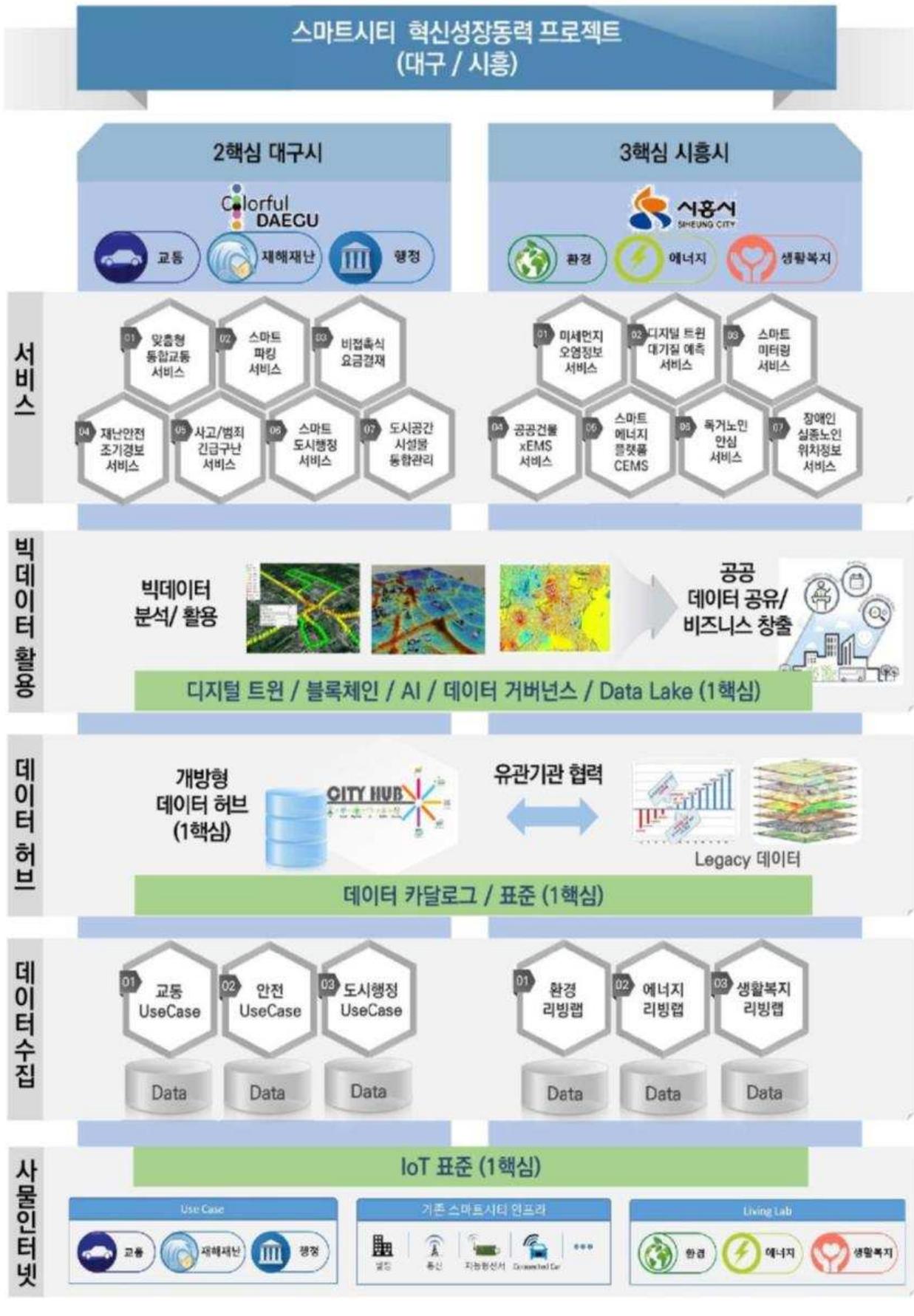
- 데이터 허브 운영 안정화 및 6대 서비스 연계 비즈니스 모델 확산
- 지자체 및 민간에서의 플랫폼 활용과 필요 연계서비스 개발 지원

⇒ R&D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AI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

*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도 관계부처와 대응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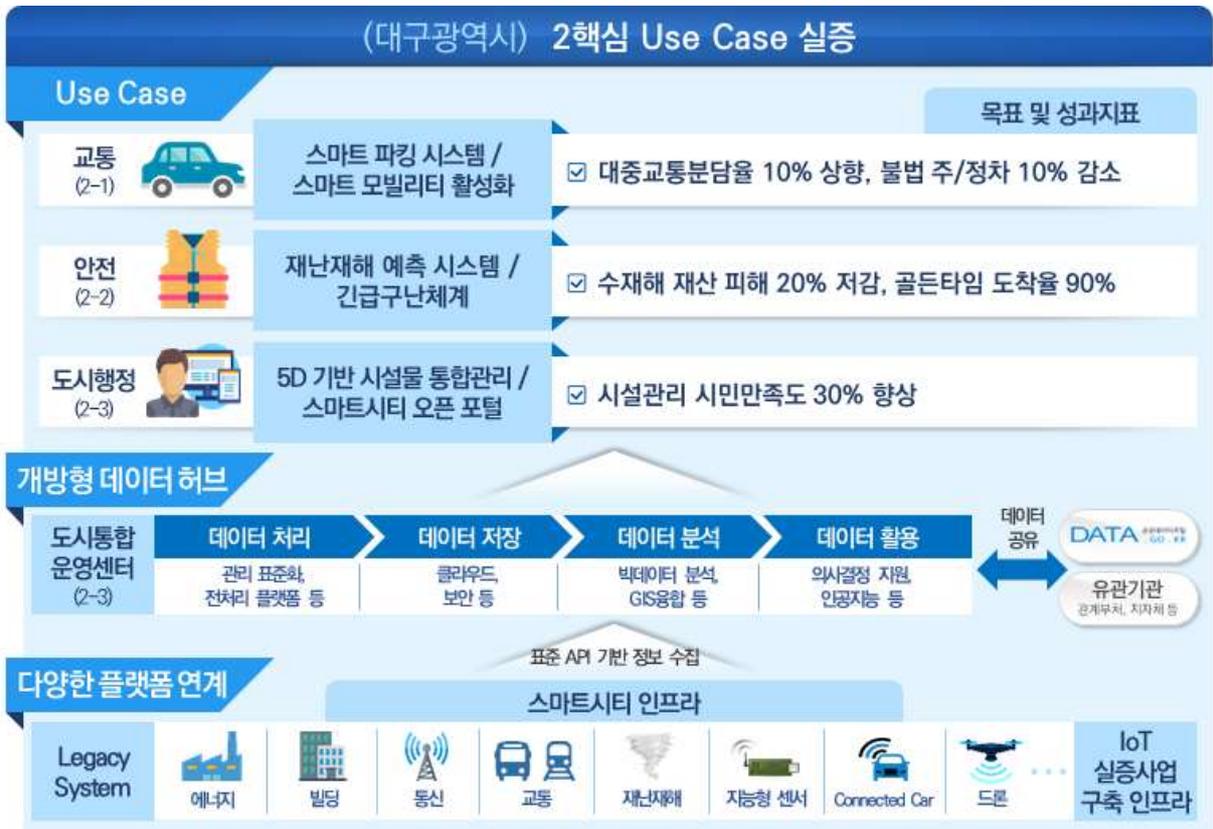
참고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R&D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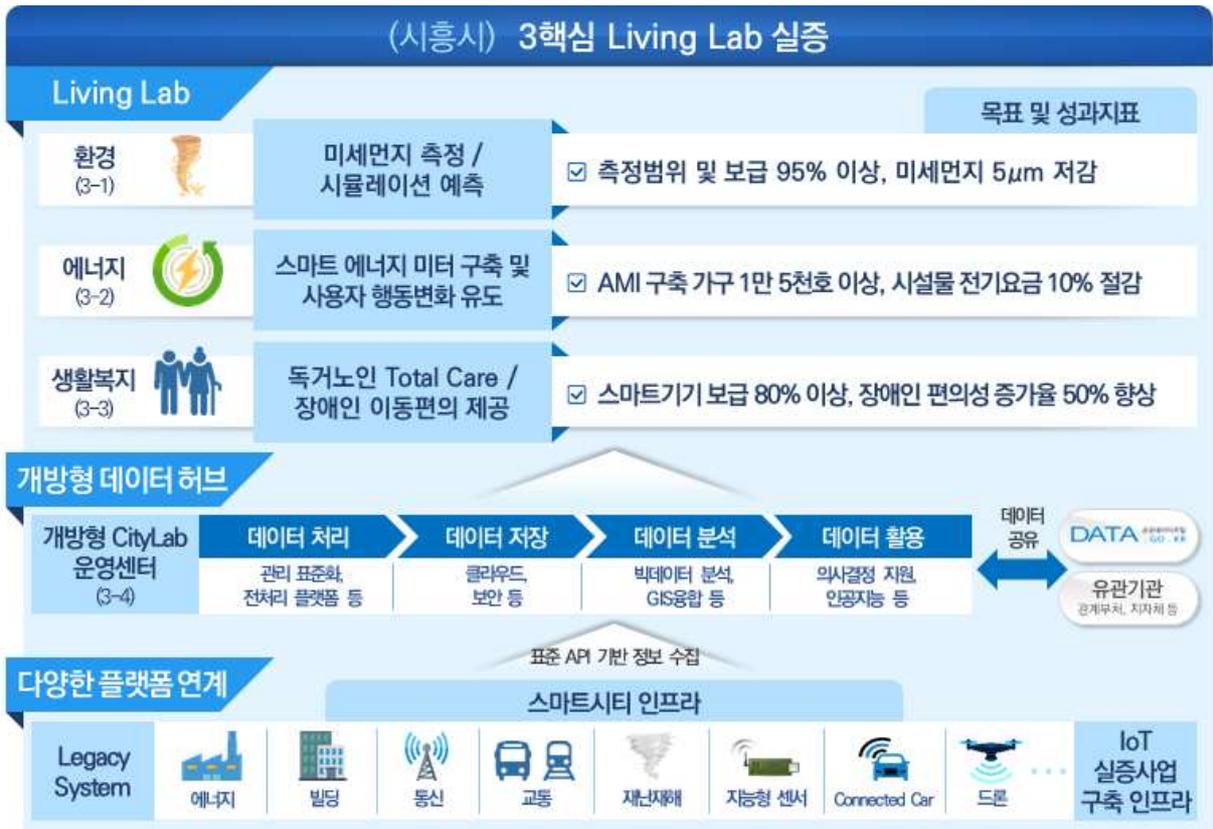
참고

2핵심 Use Case (대구시) 실증 개요



참고

3핵심 Living Lab (시흥시) 실증 개요



- ❖ 석·박사 과정 지원, 특성화 교육 등을 통해, 도시 건설과 ICT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 **향후 5년간('19~'23년) 혁신인재 450명**(교육인원 누계 1,800명) 육성

□ **사업 개요**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외 스마트시티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혁신인재육성 추진계획('19~'23)**」 수립('18.11)
 - 스마트시티 혁신 인재육성을 위한 **수행대학 6곳*** 선정('19.2) 하여, 장학금, 논문·학술발표, 인턴쉽, 창업지원 등 지원('19~'23년, 年 360명)
 - *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부산대, KAIST / 대학별 年 2.9억원 지원

《 U-City 인력양성 사업성과('09~'18) 》

- ▶ (인력양성 및 취업률) 5,632명의 전문인력 양성, 건설·교통·IT·에너지·환경 등 U-City 교육생의 유관분야 취업률도 92.5%로 높은 수준
- ▶ (U-City 연구기반 조성) 논문 425건, 학술발표 1,253건, 특허 336건 등

□ **향후 계획**

- 석사 과정(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4~10학기) 등 대학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하여 스마트시티 융복합 과정 개설('19.9~)
 - 인력양성 대학간 **필수과목*** 및 **공통교재 개발** 등 협업을 추진하고, 해외 대학과의 연계 등 **국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
 - * (예시) 스마트시티 개론, 스마트시티 계획·설계 분석방법 및 시뮬레이션 등
- **인재양성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교육 멘토링**,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고, 교육생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탐방과 실습 프로그램**도 병행

- ❖ 지자체,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 정보포털을 구축(19.12)하고,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도 병행
 -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에 대해 시기별 다큐멘터리로 남겨 기록

□ 정보 포털 구축

-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공식 홈페이지(www.smartcity.go.kr)를 구축하여, 사업계획, 기술개발(R&D), 국제협력, 거버넌스, 주요소식 등 소개
 - 국가 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지원기관, 학·협회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고, 민간기업·시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

《 스마트시티 공식 홈페이지 주요 구성·내용 예시 》

계획	사업	R&D	국제협력	거버넌스	기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3차) 스마트도시계획(現 지자체 28개) 특화단지 마스터플랜(4개)	국토부 예산사업(시범도시, 챌린지, 통합플랫폼, 도시재생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現 38곳)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스마트시티 관련 타부처 R&D(과정·산업부 등)	월드스마트시티 위드 등 각종 행사 G2G, 국제기구 협력현황 투어 프로그램	민간기업(협회, 얼라이언스) 지자체 등 공공(지자체, WeGo 등) 전문가/기관(스마트서비스 지원기관, 대학 등)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 발간물 관련 홈페이지 링크

- (뉴스레터) 주요 정책·행사, 공모 사업, 학술 정보, 채용 정보 등을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정기적으로 국민·전문가와 소통

□ 다큐멘터리 기획

-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미래 전망, 각국 동향, 국내외 사례, 정책 추진성과 등을 조명하고 DB化(아카이빙) 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 '19년에는 '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다큐를 제작(KBS, 2부작, '19.9)하고, 이후에도 미래기술을 집중 조명하는 다큐 등 기획

□ 향후 계획

- 홈페이지 제작('19.12) 및 온라인 뉴스레터를 정기 발간하고('20~), '19.9 오프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기획도 지속 추진

III - ① 과감한 규제 혁신

❖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으로 적극 개선

-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혁신적 규제개혁 방식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19년 입법 발의)

* 기존도시(챌린지) 및 국가 시범도시 대상 공모사업과 결합, 규제개선 효과 제고

1. 스마트시티 규제 발굴·개선

□ 그간 추진성과

▶ 국가 시범도시 관련 사항

- 시범도시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을 2차례 개정

- (1차)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특례와 S/W 사업, 자가망 연계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
- (2차) 시범도시 시행계획('18.12 수립) 이행을 위한 민·관 SPC 설립 근거 및 혁신적 도시계획, 카셰어링, 신재생에너지 특례 등 마련

* (1차) '18.7 法 개정 → '19.2 시행 / (2차) '19.4 法 개정 → '19.10 시행

《 「스마트도시법」 상 신산업 육성 특례(9개) 주요내용 》

구분	신산업 특례 주요내용	관계 법령	
1차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경우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 배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자율차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개발시 운전자 의무(영상장치 활용 금지) 적용 배제	도로교통법
	드론	연구개발, 안전 등 목적의 항공 촬영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	군사기지법
	자가망	공공서비스 제공시 자가망 연계 확대 허용(現 교통·안전·방범·방재만 인정)	전기통신사업법
	공공SW	공공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토록 특례 도입	소프트웨어산업법
	토지공급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	친수구역법 등
2차	도시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 등 확대	국토계획법
	공유차량	카셰어링 차량의 영업장소 한정 의무 등 완화로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여객운수법
	에너지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現 해수만 인정)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신재생에너지법

▶ 기존도시 스마트화 관련 사항

-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및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진입규제 완화 등 전국단위 조성·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
 - (사업)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법상 사업 면적제한(30만㎡ 이상) 폐지*, 민간제안 사업** 도입
 - * 연혁 : (기존) 165만㎡ 이상 → ('17.9 令 개정) 30만㎡ 이상 → ('19.4 法 개정) 면적제한 폐지
 - ** 기업, 대학 등이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 제안에 따라 민관합동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 (서비스) 도시에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가망 연계를 확대(現 교통·안전·방범·방재만 인정)*하고, 지자체간 정보 공유도 허용
 - * 스마트도시법 개정('18.8, 시범도시 한정), 과정부 고시 개정('19.3, 기존도시로 확대)

구 분	기 존	개 선
망 연계 분야 확대	교통, 환경, 방범, 방재	스마트도시법상 19종 분야 (의료, 복지, 에너지, 수자원, 등)
지자체 간 연계 허용	인근 지자체와 연계 불가	비영리·공익목적에 한해 허용 (예 :AI·구제역 대응, 범죄인 추적)

- (인증제) 스마트시티 도시·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근거 마련('17.9 시행)
- (진입 규제) 공공 SW사업(대기업 제한), IoT 사업(스타트업 제한) 관련 진입장벽 완화*, 민관 SPC 등 스마트도시법상 시행자 확대**
 - *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 과정부 지침('18.3), 스마트도시법 개정('18.8)
 별정통신사업: 자본금·인력 등 엄격한 등록 요건 개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8.12)
 - ** 민·관 공동출자법인 설립 근거('19.4), 교통·드론·에너지 관련 기업 등 추가('19.2)

□ 향후 계획

- 융합 얼라이언스, 협회 및 업계 간담회, 지자체 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개선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필요시 관계법령 개정
 - 스마트시티의 융·복합 서비스 특성상 여러 부처의 규제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4차위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적극 활용
- 개별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전문가 심의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별도자료 참조)

2.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 제도 개요

- 민간·공공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스마트도시법 개정)
 - * 관련 규제를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 ①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동 지구에서 ②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사업*은 ③4년 간 규제 특례 허용(2년 연장可)
 - * 목적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제공·이용)과 스마트실증사업(시험·검증)로 구성

《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① 지구 지정*	·지자체장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쟁의결 → 지정(국토부장관 직접 지정 可)
② 사업 승인	·민간·공공 사업계획 제출 → 관계기관 협의 → 쟁의결 → 승인
③ 규제 특례	·승인된 사업 관련 규제 4년간 일괄 해소(2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민간의 사업계획을 포함해 지구 지정 신청 시, 지구지정&사업승인 병행 가능

□ 실증 지원(안)

- (시범도시) 시범도시 구현될 서비스를 先 실증*토록 민간에 규제 특례·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공모사업('19년~, 年 56억) 추진
 - * 실증의 공간적 범위 :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관할 지자체 단위(부산·세종)
 - 2년 사업으로, 1년차에 계획·설계비(2~3억 범위)를 지원하고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경우 2년차에 규제특례·실증비(5~10억 범위) 지원
 - * 선정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소당 예산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시범도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세종과 부산의 공모분야 차별화*
 - * (세종)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7대, (부산) 로봇·물·에너지 등 10대 핵심분야 지정
- (기존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시 혁신적인 新기술·서비스 접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용 유도(例 : 본 사업 추진시 샌드박스 적용)

□ 향후 계획 : 제도기반 마련('19년 개정 추진) 및 시범사업 추진('20년 실증)

❖ 스마트시티를 플랫폼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서비스의 융·복합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 범정부 위원회(전문가·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지자체 참여 채널 운영

1. 범정부 추진 위원회

□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전략 마련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17.10),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위 운영('17.11)

* 민간위원 23인(4차위 위원 1명 포함) + 정부위원(당연직) 6인으로 구성

- (그간실적)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지원 및 자문,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진행상황 점검 등 중점 진행

* '17.11월 구성 후 총 16회 개최, '19.1월부터 2기 특위를 운영중에 있음

- (활동방향) 정부 정책 자문과 함께, 기술·인프라 고도화, 법·제도 개선, 대외협력, 시민참여·홍보, 표준화 등 다양한 논의 진행('19.1~)

□ (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따른 법정 위원회로서, 정부 정책수립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

*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6인 + 정부위원(차관급) 8인으로 구성

- (그간실적) 法 전면 개편 후 신규로 구성('18.1)되었으며,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수립, 국가 시범도시 입지·계획승인 등 구성 후 4회 개최

- (활동방향) 법정 의사결정기구로 역할하면서 산하에 4개 전문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추진전략 및 현안 등에 대해 자문('19.6~)

* ①공간계획 / ②스마트 인프라 / ③스마트 서비스 / ④SPC·재정

⇒ 범정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유관부처 협력도 지속 강화

- 스마트시티를 테스트베드로, 데이터·AI·블록체인 관련 첨단기술, 5G 활용 서비스,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수소경제 성과 등 접목

2.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 얼라이언스 구성 및 기능

- (목적) 다양한 분야의 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도모(19.2 출범)
- (구성)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와 환경·문화·거버넌스 등 스마트 시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및 공기업·연구기관 등 민간 중심
 - 얼라이언스 조직은 ①부의장단(10개社), 운영위(의결기구), 분과위(분야별)로 구성하고, ②연구·공공기관 및 협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건 발굴 추진
- (역할·운영)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등 역할을 위한 상호 협력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술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제도(규제)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정보 공유 • 중소기업 지원 • 기술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사업모델 • 상용화 기반도출 • 시범도시 적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애로사항 발굴 • 법률적 쟁점검토 • 개인정보보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방안 • 사업참여 방안

- (지원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내 전담조직*(지원단) 설치
 - * 스마트도시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및 벤처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운영

□ 얼라이언스 활동 범위(안)

- ① (사업모델) 사업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SPC 구성·사업화 방안 도출
 - 이를 위한 ①기업 현황·기술·서비스(396개社) 상세분석 및 DB 구축, ②기술·서비스 맵핑을 통한 기업간 융합·연계 방안 등 우선 추진
- ② (해외·규제) 해외 주요국과의 교차실증 및 중소·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발굴 등도 추진
- ③ (홍보) △ 홈페이지 구축(기업모집, 정보공유 등), △ 회원社 기술취합 홍보책자 제작·배포(해외진출 활용), △ 기획기사 연재, 앱개발 등 추진

□ 향후 계획

- 얼라이언스 구성('19.2) 후 시범도시 등 사업별 비즈모델 개발('19년) → 공동 비즈니스('20~'21년) → 국내외 확산('22~'23년) 등 추진
- 정부 정책·사업 공유와 규제개선 등 의견수렴 채널로 적극 활용

3. 지자체 협의체 및 간담회

□ 협의체 현황

- (개요) 4차산업혁명, 국내외 스마트시티 확산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지자체간 상시적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 필요
 - 총 85개(광역 17개, 기초 68개)의 지자체 협의회를 발족('17.9)하고, 유관 기관간 상호협력 MOU 체결('17.9, 국토부·협의회·국토연·KAIA·협회 등)
- (실적) 협의회 구성 후 참여 지자체간 총 7회 간담회 개최('19.6 기준)
 -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과기부 고시 개정, '18.12), 지자체 자가망 사용 범위 확대(4종 →19종, '18.7) 등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개선 발굴·추진
 - ※ 정부 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별 추진현황 공유와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 지자체 대상 간담회 개최도 병행중

□ 향후 계획

- 지자체 협의체 및 간담회 활성화를 통해 기존도시 스마트화 추진 우수사례 공유, 규제개선 사항 발굴, 기타 의견수렴 등 지속('19.下~)
 - 광역·기초 지자체 대상 개별 간담회도 진행, 맞춤형 협력방안 도출
-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내실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추진,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확충(例 : 年 2회 →3~4회) 등 지원 강화('20~)
 - * (例) 지자체 계획(안) 수립 지원, 체크리스트 마련, 헬프데스크 운영, 전문가 자문 등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 내 지자체·기업 전시와 비즈니스 장을 마련하여, 스마트시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마켓 창출

4. 기타 거버넌스 현황

▶ 스마트시티 지원 기관 등

-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 수행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 전문기관 등과 거버넌스 운영
 - (지원기관)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과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해외수출 등 업무 추진을 위해 7개 지원기관을 신규 지정('19.1)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사업시행) 시범도시(LH, K-Water 등), 혁신성장 R&D(KAIA), 챌린지(국토연구원), 테마형 특화단지(LH) 등 사업 추진시 주관기관·시행자 등참여
 - (인력양성)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사업을 위해 6개 대학 참여중('19년~)
 - *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부산대, KAIST
 - (기타) 인증제(국토연구원, 전기연구원), 창업지원(스마트도시협회), 학술교류·협력(KAIA), 해외수출 지원(해군협, KIND, KOTRA) 등 다양한 기관 참여중

▶ 해외수출 지원 협의회(가칭)

- 'K-스마트시티 수출지원 협의회'를 출범, 정부·공공기관·민간이 해외 진출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한 협업창구 운영·추진('19.下~)
 - * 구성: 국토부(1차관 의장)·기재·과기·산업·환경부 + LH·KOTRA·대건협·KIND 등 참여

▶ 시민참여 및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대국민토론회, 토크 콘서트, 해커톤, 공모전 등 시민참여 행사 확대(매년 진행)
 - 국가 시범도시 관련 시민 참여와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네이밍 등 경진대회를 既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인 '스마트시티 1번가'도 운영
-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R&D 실증 등 다양한 사업에서 추진하는 시민참여 리빙랩을 연계, '(가칭)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방안 검토('20~)
 - 대국민 참여·공론의 場인 '(가칭)스마트시티 시민 위원회' 출범도 검토

참고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주요기관 현황('19.6 기준)

위탁 / 지원 / 담당업무		기 관	비 고	
국가 시범 도시	세종 5-1 생활권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도시개발처 (시범사업추진부)	
	부산 EDC 사업시행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물순환사업처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사업	디지털 트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간정보처 (공간정보기획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정보실 (플랫폼개발부)
		데이터·IA 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능데이터단 (지능데이터기획팀)
		스마트 교통	한국교통연구원(KOTI)	4차산업혁명교통본부 (스마트시티 교통연구팀)
		헬스케어·교육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디지털헬스산업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미래교육정책본부 (저작권·표준 연구부)
		에너지·환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도시개발처 (시범사업추진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물에너지처 (수열에너지사업부)
		안전·생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도시개발처 (시범사업추진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물순환사업처
	로봇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전략기획실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 혁신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해외진출팀 IoT 산업팀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도시	국토연구원(KRIHS)	스마트공간센터
		단지 솔루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도시개발처 (스마트시티사업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LH,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 등	-	
기반 구축	통합플랫폼	스마트도시협회	기술개발센터	
	혁신성장동력 R&D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스마트시티 정보 포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	총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규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스마트·녹색연구단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도시	국토연구원(KRIHS)	스마트공간센터
		서비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스마트시티연구센터
	혁신인재육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진흥본부 (사업관리팀)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국제 협력	스마트시티 엑스포	LH, K-Water, KINTEX	-	
	해외수출 지원	해외건설협회, KIND, KOTRA	-	
	투어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연구소	

참고

스마트시티 관련 시민참여 추진 실적

◇ 시범도시를 포함하여,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구축·운영중

□ 주요 추진실적

- 시범도시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도시 시뮬레이션 경진대회(42건 제출), 브랜드 공모(총 3,300건) 진행 및 스마트시티 1번가(219건) 운영 - 시행계획 초안 수립 후 세종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8.12)
-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와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국민 토론회 및 해커톤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

행사명	일정	주요 내용	
시범도시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 (세종)	'18.4.6~ '18.9.3	· 창의적 네이밍 및 기본구상·도시개발방안 등 국민의견 제시(게임 활용) * 총 42건 참여
	시범도시 브랜드 공모전 (부산)	'18.4.23~ '18.5.14	· 시범도시 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 * 총 3,300건 접수, 네이밍 및 슬로건 각 13명 수상
	스마트시티 1번가(부산)	'18.9.7~ '18.9.15	·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시민·기업 아이디어 219점 접수
	대학생 간담회·해커톤 (부산)	'18.10.30	· 전문가 강연 및 도시문제 해결 관련 해커톤 진행 * 부산지역 건설·도시관련 전공학생 100여명 참여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세종)	'18.12.11~	· 스마트시티 추진본부 내 시민분과 구성·운영 * 1-4층 리빙랩(20명) + 공개 모집 일반시민(55명)
	세종시민 대상 공청회 (세종)	'18.12.19	· 세종 5-1 시행계획(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시민·언론사(대전일보, 대전 MBC) 등 150여명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19.2.13	· 스마트 솔루션 시민 체험,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대한 기업, 시민 의견 수렴 * 300여명 참석
월드 스마트 시티 워크	부산시민 대상 설명회(부산)	'19.5.2	· 부산 시범도시 시행계획 설명 및 주민 질의·응답 * 시민·언론사(부산 MBC, 부산일보) 등 300여명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18.7.24~ '18.8.30.	· 스마트시티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서비스 우수사례 및 창업아이디어 부문 경진대회 * 일반국민, 학생 및 창업 예정자 등 총 192명 참여 (27점 수상)
	대국민 토론회	'18.8.30~ '18.9.18.	· 스마트시티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총 5개 도시(세종·광주·대구·부산·서울) 350여명
연계행사	스마트시티 해커톤	'18.9.19~ '18.9.20.	· 시민에게 필요한 스마트시티 It-tem 개발에 대해 무박 2일 동안 아이디어 제시 * 30개팀 132명 참여, 총 10개팀 본선진출 및 수상

- ❖ 국내 스마트시티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 「스마트도시」, 「스마트서비스」 대상 지표기반 인증제 연구('19년) 및 2년 간('19~'20년) 시범인증 시행, '21년부터 본 인증 착수 추진
 - 표준화 추진체계를 지속 운영('18년~)하고, 연구용역(R&D)도 추진 검토

1.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제

□ 추진배경

- 국가·기업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성과평가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성과를 측정할 별도 평가체계 부재
 -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IDC* 등 국제평가에 대응하는 상황
-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 세계적인 시장분석 및 컨설팅기관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별·도시별 평가 검증
- ⇒ 한국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마련 필요

《 국내 지자체의 해외인증 수상 내역 》

지자체	수상 내역	비고
대전광역시	'17년 IDC 공공안전 분야	119 긴급출동
인천광역시	'17년 IDC 도시행정 분야	통합운영센터
대구광역시	'18년 IDC 시민참여 분야	시 민원응대 챗봇
부산광역시	'18년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어워드	교통분야
세종특별자치시	'18년 영국표준협회(BSI) 국제인증 세계최초 획득	5대 시범도시 선정

- 인증제도 개요(안) * 검토 중인 사항으로 추후 내용 변경가능

▶ 스마트도시 인증제도

- (인증대상) 162개 시·군 * 자치구로 확대 여부 추후 검토

- (인증방식) 5등급(A~E)으로 평가해 C등급 이상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고, 기술변화 속도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
-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서비스·기술 인프라 등 3개 분야 평가

《 스마트도시 인증제도 평가 지표 》

- (혁신성) 공무원 전문성, 리빙랩 운영수, 지자체 데이터 오픈 API 제공 건수 등
- (거버넌스·제도) 협의체 활동건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여부, 해외기관 MOU 체결 등
- (서비스·기술 인프라) 필수(교통·안전 분야), 선택(택3, 행정·주거·교육·에너지 등)

▶ **스마트서비스 인증제도**

- (인증대상) 스마트서비스 개발사, 제공자 또는 운영·관리자로, 기업, 지자체, 협회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청 가능
- (인증방식) 총점 60점 이상일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신규 서비스 도입 촉진, 기술변화 속도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
- △공통, △성능, △운영 등 3개 분야에 대해 11개 항목으로 평가
- *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초기에는 인증대상(수요자) 제안형으로 기준 운영

《 스마트서비스 인증제도 평가 지표 》

- (공통) 삶의 질 개선, 도시 경쟁력 제고(고용창출 등), 지속가능성(운영관리 등)
- (성능) 플랫폼 연동, 통신전송표준 채택 여부, 서비스의 목표 성능 달성여부 등
- (운영) 서비스 설치·운용 용이성, 장애요인 제거방안, 데이터 보완 여부 등

□ **향후 계획**

- 시범인증을 통해 인증기준의 적합성, 인증 인센티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표 보완 및 확산방안 마련(~'20년)
- 인증제 웹페이지 구축 및 관련 지침 마련 추진(~'21.上)
- 본 인증제 시행 추진('21.下~)

2. 스마트시티 표준화

□ 추진배경

-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융·복합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술·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
- 스마트시티 표준화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만큼,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필요

□ 표준화 추진 현황

- 범 정부 스마트시티 표준 패널을 구성해 운영('18.4 / 9월 2차례 회의)
 - *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토연구원, KAIA, ETRI, KT, SKT, 한국표준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0개 민·관 기관이 참여중
 - 패널 참여 기관 등과 함께, ①스마트시티 아시아 지역 10개국 표준 포럼('18.6), ②국제 스마트시티 표준 포럼('18.10) 등 공동 개최·대응
-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 및 인증제 실시('18.5) : 20개사 제품 인증
 - * LG CNS, KT, ESE, 한컴 등 20개 기업의 통합플랫폼이 인증 취득('19.6 현재)
 - 도시 안전 5대 연계서비스 표준화 및 공통 UI 개발('18.11, 설명회 개최)

□ 향후 계획

- 스마트시티 표준 패널 개최를 정례화(분기별)하여 논의 확대('19.下)
 - *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한 작업반 구성도 검토 : ①부처 R&D 표준 연계, ②국제표준 협력, ③국가전략 R&D 표준 도출, ④국가표준-단체표준 연계 등
 - 엑스포('19.9) '표준 섹션' 운영, 아시아 10개국 포럼 협력('19.下) 진행
-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R&D)* 추진('20~)
 - * 스마트시티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상호 연계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중장기 추진 로드맵 수립으로 국제 표준화 대응

- ❖ 중소·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협업으로, 향후 5년간 年 100개 내외 청년창업 지원 추진
 -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주방식 개선과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온라인 솔루션 마켓 운영('19.12~)도 병행

1. 스마트시티 청년 창업지원

□ 개요 및 현황

- 정부는 청년 일자리(39세 이하)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4차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창업지원 사업에 착수('18.5~)
 -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소요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억원 지원
- '18년에는 스마트시티 분야 35개 사업 지원(LH 15, 스마트도시협회 20)
 - * 1개사 평균 5.9천만원 지원 / 35개사 × 4.1명 = 143명 일자리 창출 효과
- ⇒ '19년 신기술 17개 분야, 400개 중 스마트시티 110개 추진('19.3, 중기부)

□ '19년 사업계획

- (예비 창업자 공모) 스마트시티 창업에 뜻이 있는 39세 이하 일반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 실시, 110명 선정('19.4~'19.5, 주관기관*)
 - * (주관기관) 수자원공사(20명), 스마트도시협회(70명), 한국발명진흥회(20명)
- (창업 지원) 예비 창업자 교육(40시간), 전담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19.6~'20.3)
 - *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국토부), 인큐베이팅센터(LH) 연계 시 효과 제고 기대
- (창업 이후)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협회 회원사 연관 사업 등 참여, 전문가 Pool(약 100명) 개별 멘토링 지원('20.4~)
 - * 우수 창업기업은 초기창업(초기3년) - 창업도약(3년 이상) 패키지 등 연계 지원

□ 향후 계획

- 선정('19.5)된 스마트시티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지원 진행('19.6~'20.3)
- 연도별 100개 내외 스마트시티 예비 창업자 신규 선정(중기부 협의)
- 국가 시범도시·혁신성장동력 R&D의 데이터 허브 등을 활용한 창업기반 구축 추진('21~)

2. 스마트시티 공공구매 혁신

□ 추진 개요

- 다양한 분야 융·복합 제품·서비스가 도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기존 발주방식에서 탈피해 「스마트시티형 발주방식」 도입을 추진
 - 기존 방식의 진입제한을 완화해 ❶新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누구나 참여하고 도시 내 ❷서비스 전체를 통합 발주* 가능한 방식 검토
- * 개별 서비스별로 분리 발주 시, 데이터 공유 등 서비스 간 상호 연계 곤란

《 기존 스마트시티 발주 방식 》

대상분야	근거법률	발주방식	한계	사업예시
정보통신 (HW 중심)	정보통신 공사업법	적격심사 (가격평가)	기술 보유 기업 진입 어려움	·통신망 관로·선로 설치 ·설비(CCTV, 센서 등) 설치
소프트웨어 (SW 중심)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협상방식 (기술+가격평가)	대기업 참여 제한	·서비스 개발(실시간 교통정보, 신호제어, 스마트가로등 등)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특화단지, R&D 등 스마트시티 사업 성과물의 수주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❶시제품 시범구매, ❷R&D 혁신제품으로 지정
 - * ❶ 시제품 시범구매 : 상용화 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
 - ❷ R&D 혁신제품 : 국가 R&D 제품 중 각 부처에서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 지정

□ 향후 계획

- '19년 하반기 연구용역 추진 후 추진방향 도출 및 제도 개선('20년~)

3. 온라인 솔루션 마켓 구축

□ 추진 배경

- 국가 시범도시 추진 및 기존도시 스마트화(특화단지, 챌린지) 사업, 스마트 인프라 건설 확대* 등 조성·확산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음
 - * '18년 38개 지자체, 52개 지구 → '19년 53개 지자체, 79개 지구
- 또한 지자체 전담부서 증가('19년 46곳),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19.2), 스마트도시협회 회원사 증가('18. 111사 → '19.6 138사) 등 참여도 확대
- 다만,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시장은 수요·공급 주체 간 '정보 소통의 장' 부재로 활성화에 한계
 - ⇒ 협회를 중심으로 솔루션 중개와 스마트시티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개 커뮤니티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Solution Market)' 구축 추진

□ 추진방안

- 스마트시도시협회 주관으로 마켓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작
- 솔루션 마켓에는 스마트시티 수요-공급자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협력
 - 수요자 : 지자체(광역 17, 기초 229), 공기업, 수출기업, 해외바이어
 - 공급자 : 통합플랫폼 및 컨설팅(도시계획) 회사, 협회 회원사(138개사), 스타트업 창업기업(145개사), 스마트시티 분야별 솔루션 업체 등

□ 향후 계획

- 솔루션 마켓 콘텐츠 모집(상시) 및 마켓 오픈('19.9), 고도화 진행('20년~)

1단계 : 솔루션 마켓 ('19.9월 1차 오픈)	2단계 : 마켓 고도화 ('20.上)	3단계 : 국내외 네트워크 ('20.下~)
· 상용화된 솔루션* 게시 · 수요·공급자 커뮤니티 공간	⇒ · 창업기업, 대학·R&D·챌린지 성과물 등 확대 · 오픈형 시스템 구축	⇒ · 영문판 발행 · 해외바이어, 수출기업 · 국내외 주요사이트 연계

* 솔루션 마켓 1단계 오픈(9.2)까지 1천여개의 솔루션 모집·게시 계획

IV - ①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 ❖ 한국의 강점을 살린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추진('19.下~)
 - ① 해외수주 금융지원 강화, ② 네트워크 구축, ③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④ 전방위 수주노력 강화 등 포괄적 지원방안 추진

□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① 해외수주 금융지원 강화

- (PIS 펀드)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조성하고, 5천억원 내외를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
 - 민간자금 유치확대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이 후순위로 출자*하고, 복합금융구조**를 설정하여 민간투자 리스크 대폭 완화
 - * PIS 펀드 : '정부→공공→민간' 순으로 손실을 부담하여 민간 투자유인
기존 GIF : 정부, 공공, 민간 구분없이 투자자 전원 동순위 손실부담
 - ** KOICA 무상원조, EDCF, EDPF, 정책수출금융, 민간금융 등을 연계하여 사업투자
- (금리우대)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금리 우대
 - * 초기 100억 원 설정 이후 기업 수요, 지원추이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확대
- (무역보험) 초고위험국 해외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무보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시티 수주에도 적극 활용
 - * 일반 수출금융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초고위험국 스마트시티 수주시 활용 가능
- (EDPF) 투자개발형 프로젝트(PPP)가 대부분인 글로벌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험증진자금(EDPF) 활용 확대
 - 현지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법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지원대상국도 확대

②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 (K-SCON) 한국 주도 국제협력체계인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를 구축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시범사업 등 추진
 - *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에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국-해외 정부 비용 매칭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 참여국 대상 국제공모를 통해, MP 수립, 사전타당성 조사 등 지원
→ 향후 해당 프로젝트의 본 사업 참여까지 확대 도모
- (시장개척자금) 시장개척사업 지원* 범위를 건설공사·ENG → 건축설계·ICT 도시솔루션 분야까지 확대하여 해외수주 다각화
 - *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교섭 비용지원 예산사업(사업당 2억원 이내 지원)
- (DB구축) '범부처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스마트시티 DB를 구축하여, 해외국가별 발주정보* 등을 적시 제공
 - * 국가별 △사업 환경(필요 기술, 솔루션 수준), △프로젝트 발주정보 및 절차, △우리정부·국제기구 지원 정보 등을 One-stop 제공
- (협력거점) KOTRA 무역관內 「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센터」 등을 신규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활동 지원*
 - * 유망 프로젝트 정보 발굴 및 전파, 발주처와 국내기업간 파트너십 구축, 국내 기업 컨소시엄 마케팅, 국내기업 입찰 참여, 현지 법률 자문 등 포괄적 지원
- (초청연수) 개도국 대상 해외수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마트 시티 특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청연수 대상국가 확대

③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 (월드엑스포) 세계 3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를 목표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CE 2019)」 신규 출범('19.9, 킨텍스)
 - 대·중소·스타트업 기업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고, 비즈니스 성과 도출을 위한 국내외 주요 발주처와 산업체 간 교류의 장 마련
- (컨소시엄) 주요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입찰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로드쇼) 아세안 등 수출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중소·스타트업 중심의 해외 로드쇼 개최(연 5회 내외)
 - 정부 수주지원단을 공동파견하여 홍보효과 확대 및 수출 제고
- (얼라이언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사업모델 발굴
- (맞춤형 진출) 시장조사를 통해 주요 분야별 특화 솔루션을 선정,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동반진출 전략 수립
 - 또한, 공통의 도시문제를 겪는 국가(EU, 미국, 싱가포르 등)와 특화 솔루션을 교차 실증하고, 이를 통해 제3국 공동진출 추진

④ 전방위 수주노력 강화

- (Team Korea) VIP·총리 순방 등 고위급 외교활동 시, 국가차원의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및 로드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압둘라 시티 본사업 수주를 위한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 주요 아세안국가 경제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 프로젝트 적극 발굴
- (지원체계)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에 스마트시티 분과(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 간사 국토부)를 신설·운영하고,
 - 국토부內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조직체계를 강화하여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해외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 등 총괄
- (KSP) 스마트시티 해외 프로젝트 기획·발굴 지원에 KSP(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의 일정 부분(예: 총액의 5% 내외)을 별도 배정
 - 대규모 스마트 신도시 개발 및 솔루션 구축 사업의 기획·수주·건설·운영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통합 지원
- (민간교류)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를 '스마트시티 민간 대외협력관'으로 임명, 발주국 주요관계자 면담 등 지원

□ 향후 계획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모델·로드맵 수립 및 지원 추진('19.下~)

IV - ② 스마트시티 교류협력 강화

- ❖ 한국과 해외정부·국제기구·연구기관 간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및 해외진출 지원('19년~)

□ 교류협력 강화 방안

① 주요국 및 국제기구 협력 확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주요국 MOU 체결** 등 G2G 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 지속 확보
 -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도시와의 교차실증 등을 추진하고, 개도국 대상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F/S) 등 시범사업도 병행
- * 개도국(아세안, 중남미 등) 및 선진국(유럽, 미국) 등에서 기술협력 등 수요 급증
- ** MOU 체결 실적('18~'19) : 페루('18.3), 오만('18.7), 중국('18.8), 말레이시아('19.3)
-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기술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와의 공동 사업도 확대
 - 기존의 월드뱅크(WB) 협력 사업*을 확대·지속하고, 중남미 진출 등을 위한 미주개발은행(IDB) 등 협력 대상 국제기구 다변화도 추진
- * '18~'19년 중 △솔루션 포털 운영, △전문가 파견·컨설팅, △지식공유 프로그램 추진

② 국제 학술포럼 등 확대

- 국내외 우수 스마트시티 정책·기술 상호교류 및 선진 솔루션 공유, 공동연구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국제 포럼 개최 추진
 - * 현재 KAIA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중이며, 규모 확대 검토
- 스마트시티 관련 우수 대학·연구기관 대상 교수·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구 아카이브 구축과 학술 리포트 발간 추진

□ 향후 계획

- 연간 국제협력 계획 관계기관 공유, G2G 협력·국제 포럼 등 추진('19.下~)
-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지원조직 구축('20~)

① 아세안(ASEAN)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시범사업(기본구상 및 pre-F/S) 추진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 계기 시범사업 성과 발표 추진
- (싱가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스마트시티 MOU 체결 추진 ('19.11) 및 향후 협력사업 발굴 협의 계획
- (인니) 스마트시티 MOU('16.10) 후속조치로 초청연수 추진('19.8 예정) 및 한-인니 협력회의를 거쳐 협력사업 발굴 추진('19.하)

② 스마트시티 선도국 : 유럽, 북미

- (네덜란드) 스마트시티 MOU 체결 추진('19.7, 잠정) 중으로, 이를 계기 교차실증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 (북유럽) 덴마크·노르웨이 등과 MOU 체결을 추진 중으로, 향후 교차실증(에너지, 환경, 데이터 등) 등 실질 협력사항 논의 추진
- (미국) 스마트시티 제3국 공동진출 협력체제 구축 및 상무부 산하 국가표준기술원(NIST)의 GCTC 참여를 통한 해외수출 제고 도모

③ 동북아,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 (중국) '스마트시티 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 추진
- 동북아(일본, 홍콩 등), 중동(사우디, 이라크 등), 남미(페루, 칠레 등) 및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크 등) 등 다수 국가에서 협력 희망

④ 국제기구 협력

- (WB) ①홈페이지 구축, ②전문가 교류, ③공동 워크숍 등 국토부-WB 공동사업 추진 중으로, 향후 제3국 공동진출 협의 검토
- (OECD) 국토부와 공동 세미나 개최 및 협력사항 발굴 지속

-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외수출 제고, 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CE)' 출범('19.9)
 - 기존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17~'18년)'를 확대 개편하여 향후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행사로 육성

□ 추진 경과 및 개편 필요성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시 분야 최고의 화두는 "스마트시티"로서,
 - 주요국은 스마트시티 이슈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며, 대규모 기술투자와 함께 대대적인 국제행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보
 - * 바르셀로나 Smartcity World Congress, 싱가포르 World cities summit(매년 개최)
 -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스마트시티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했고,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대표적인 행사도 부재한 상황
 - * 개별부처, 기관별 국제 행사는 단편적·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한계
 - 이에 따라, 한국 스마트시티 홍보 및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아태지역 대표 국제행사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를 개최('17.9)
 - 각 부처·산하기관·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다양한 스마트시티 유관행사를 통합·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
 - * 통합 홍보, 투어 프로그램 공동운영, 기관 간 MOU 체결 등 추진
 - 다만, 2차례의 WSCW 성공 개최*('17~'18)에도 불구하고, 국제인지도, 브랜드, 전시·컨퍼런스 수준, 홍보 등 개선 필요사항 다수 존재
 - * ('17.9 1회) 13천명 참여, 213개사 452부스, 계약체결 300억, 상담액 1,200억원
 - * ('18.9 2회) 21천명 참여, 250개사 947부스, 계약체결 775억, 상담액 4,600억원
-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신규로 출범하여, 산학연관 교류와 비즈니스 장을 제공 ☞ 산업 활성화, G2G협력 및 정책 홍보 제고

□ 엑스포(WSCF) 추진 계획

▶ 행사 개요

- (주최/주관) 국토부, 과기정통부 / LH, K-water 등
- (후원) 4차위, 기재부, 환경부, 외교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
- (참석자) 국토부 장관, 각 부처 장관, 글로벌 선도기업 CEO, 대·중소기업(얼라이언스), 지자체, 국내외 도시 관계자, 전문가 등

행사 기획방향

① 신규 국제행사 출범 ☞ 행사 브랜드 확립

- 기존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WSCW)'에서 확대 및 국제행사 위상제고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신규 출범('19.9)

② G2G 협력 강화 ☞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

- 주재관, 국제기구, 주한 대사관, 한-아세안 센터 등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초청 확대 ☞ 글로벌 이슈 선도

③ B2B 행사 강화 ☞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와 신 성장 동력 확보

- 대기업 및 ICT 전문기업의 전시참여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국내외 주요 바이어와 산업체 간 교류의 장 주선

④ 국민소통 강화 ☞ 혁신기술과 미래비전 공유의 장 마련

- 최첨단 기술 융합과 철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전달

▶ 행사 구성(안)

- 대·중소·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전시관, 국제 컨퍼런스,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비즈니스 행사, 대국민 참여행사 등으로 구성

공식행사	컨퍼런스 (세미나)	전시회
개막식 (VIP 오찬) 환영만찬, Awards, 통합 시상 및 폐회식	컨퍼런스, 세미나,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 G2G 프로그램(면담 및 MOU)	국가시범도시 홍보관, 국가 및 도시관, 기업관, 체험존 등
비즈니스행사	국민참여행사	부대행사
비즈 매칭, 비즈미팅, 네트워킹 파티 등	메이커톤, 토크 콘서트, 공모전, 지자체 협의회, 경진대회 등	포토존 등

□ 향후 계획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19.9, 킨텍스) 추진(매년 행사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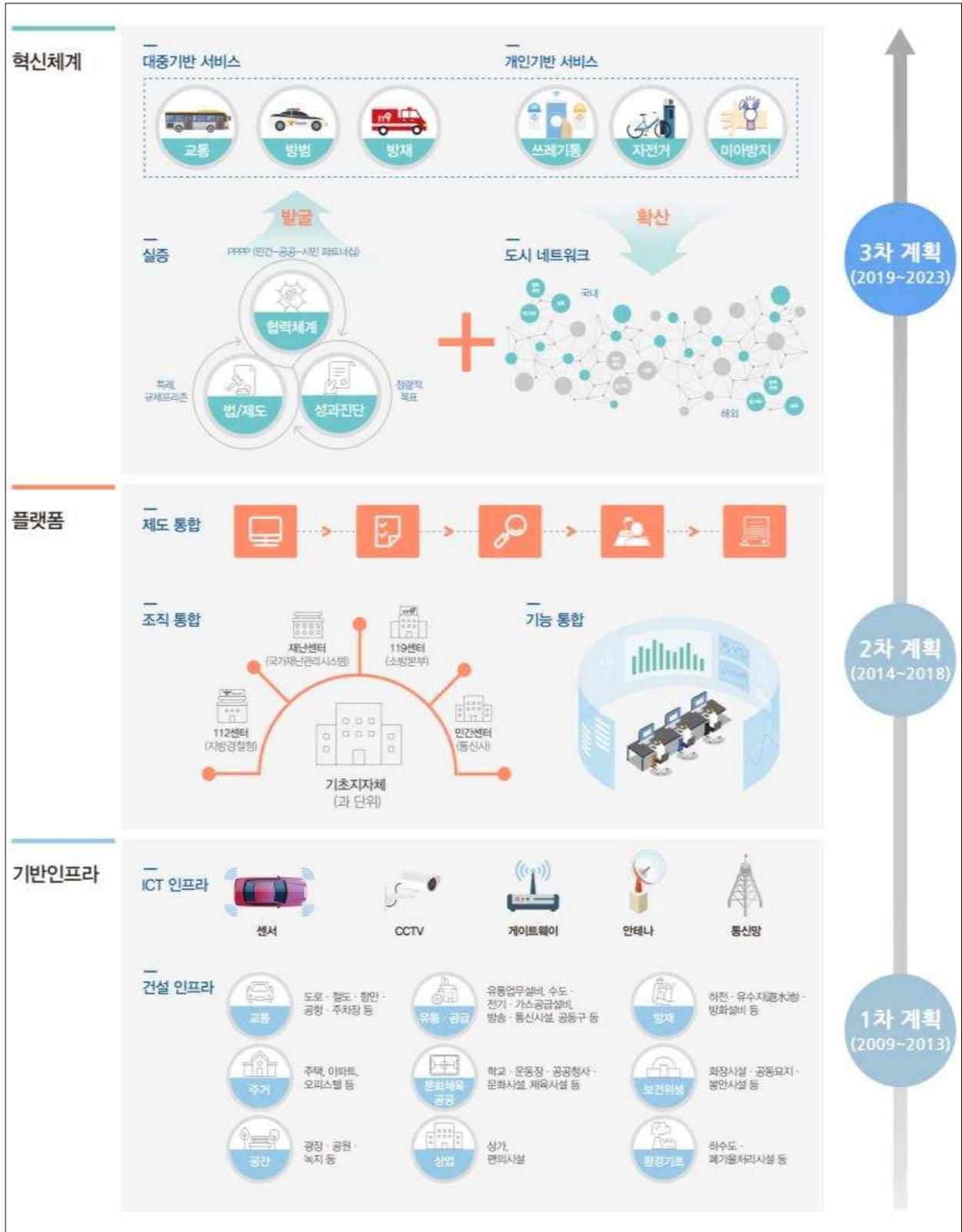
V. 추진 일정

분 야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①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국가 시범도시 성과창출 및 확산	· 콘텐츠(기술·서비스) 개발('19~) · 시범도시 입주 前 테스트베드인 '스마트빌리지' 조성('20.下) · 물리적 도시공간 조성('19~) 및 입주('21.下)
	기존도시 스마트화 확대	·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개편('19~) · 스몰 프로젝트(Small Project) 도입('20~)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추가 선정 (~'22, 年 5곳 내외)
②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통합플랫폼 조기 확산	· 통합플랫폼 전국으로 보급(~'23) ·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추진('19~)
	혁신성장동력 R&D 성과 창출	· 데이터 허브 플랫폼 개발(~'19) · 기술검증 및 실증('20~'21) · 사업확산 및 비즈니스화('22~)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 혁신인재육성 수행대학 내 스마트시티 융복합 과정 개설('20.下) · 해외 우수대학과 연계프로그램 추진('21~)
	스마트시티 정보 공유·축적	· 정보 포털 홈페이지 구축('19.12) · 다큐멘터리 제작('19.下) 및 지속('20~)
③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19~) ·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추진('19~)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 기업간 기술협력, 사업모델 개발('19~) · 공동 비즈니스('20~'21), 국내외 확산('22~'23), · 지자체 협의체 활성화('19~)
	스마트시티 인증제·표준화 추진	· 도시·서비스별 지표기반 인증제 도입('19) 시범인증('19~'20), 본 인증제 시행('21~) · 스마트시티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20), 중장기 로드맵 수립('21)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구축 지원	· 창업지원(중기부 협력, '19~) · 스마트시티 공공구매 혁신제도 개선('20~) · 솔루션 마켓 구축('19.下), 고도화('20~)
④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전략 수립	· 해외 수출전략 수립 및 단계별 지원 추진 ('19.下~)
	스마트시티 교류협력 강화	· G2G 협력, WB, IDB협력사업, 국제포럼 등 추진('20~)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매년)

참고 1

제 1~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관계도

- 제 1·2차 종합계획 성과인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3차는 도시 네트워크 구축, 체감형 서비스 실증,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4대 전략 14대 추진과제

SMART CITY

전략 01 도시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합니다.



국가 시범도시

- 4차산업혁명기술 집약(세종·부산)
- '21년말 최초 입주 목표(부산)
- 범부처 R&D 연계·실증 확대

기존 도시

- 교통·환경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 제공
- 예도시·자치단체·사·솔루션 단위로 재편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포용도시 조성

노후 도시

- 저비용·고효율 스마트솔루션 적용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22년까지 25곳 이상 조성)

전략 02 스마트시티 확산기반을 강화합니다.



통합플랫폼

- 복지·환경 등 서비스 확대
- 기초지자체 연계 광역센터(사·도) 구축



연구 개발

- '18~'22, 1,287억원 /
-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개발
- 핵심 스마트서비스 실증(대구·시흥)



인재 육성

- 향후 5년간 450명 교육
- 석·박사 스마트시티 과정 운영



시민 소통

- 정보포털 구축 뉴스레터 발간 (www.smartcity.go.kr)
- 스마트시티 다큐멘터리 제작

전략 03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규제 개선

-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 실증 지원

거버넌스

- 라벨링, 기업 얼라이언스 등 활성화
- 지자체 협의회, 범정부 추진위 운영

표준화·인증제

- 세계시장 선점 목표 국제표준화 추진
-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제 추진

산업기반 구축

- 年 100여개 청년창업 지원(중기부 협업)
- 스마트시티 온라인 솔루션마켓 구축

전략 04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

- PIS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 강화
- 대·중소기업 등 동반진출 지원



교류협력 강화

- 해외 MOU, 시범사업 등 협력
- 국제 포럼 등 정책·기술 교류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 해외 협력(G2G) 및 비즈니스(B2B) 지원